

2009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2009. 10.



순서

2009. 10. 9(금) 문화재청 국정감사시

강 승 규 의원	1
김 금 래 의원	5
김 을 동 의원	9
김 창 수 의원	15
김 호 재 의원	23
나 경 원 의원	35
변 재 일 의원	41
성 윤 환 의원	47
송 훈 석 의원	53
이 경 재 의원	63
이 정 현 의원	69
장 세 환 의원	85
정 병 국 의원	89
조 영 택 의원	97
진 성 호 의원	105
최 구 식 의원	109

〈 목 차 〉

〈강 승 규 의원〉1

【서면질의】

1. 감사원의 조사기관 중복투입 지적 및 조사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3
 - 1) 감사원 감사에 배치되는 시행규칙 신설 등
2.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시급 3
 - 1)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모든 문화재 소장처에 화재경보시스템 및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 2) 도난문화재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 경찰 및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 3)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

〈김 금 래 의원〉5

【구두질의】

1. 문화재청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공항 검색요원은 받은 바 없다고 하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바람 7

〈김 을 동 의원〉9

【서면질의】

1.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건 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11

2.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기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업무분야나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서류 전형을 하는 방안으로 직원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11

<김 창 수 의원>15

【서면질의】

1. 4대강 사업에 편승한 조사인력 자격기준 완화로 부실조사 17
2.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17
- 1) 학예연구직 채용 당시 전공과 현재에 맡은 업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박물관의 학예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 3)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립중앙박물관 사례 등을 봤을 때, 국립고궁박물관내 교육과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학박사 소지자 등을 배치해 고궁박물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4) 박물관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3.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조직과 예산확보를 통한 문화재보존처리 중추기관으로의 육성방안 17

<김 효 재 의원>23

【서면질의】

1.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보존 및 개발관련 25
- 1) 태릉의 선수촌, 의릉·서오릉의 왕릉과 관련 없는 건물, 온릉·장릉의 군사시설 등에 대한 대책과 광릉·영릉 등 능역의 완충지역에 대한 적절한 개발 지침 현황은
- 2) 조선왕릉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은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와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증진 대책

3) ‘조선왕릉’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스토리를 개발해야 할 것임. ‘대장금’스타일의 전통 궁중음식과 관련한 문화상품의 개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4) 조선왕릉의 종합적 보존관리 대책은?

5) 조선왕릉이 등재된 이후 1주일만에 관람객이 평균 47.5%나 늘. 제주도의 경우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1년만에 관광객이 20%나 늘었음. 세계유산 등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임. 이제 이런 수천년의 지혜가 쌓여온 문화유산을 산업적 측면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헤리티지 인더스트리(Heritage Industry. 문화유산 활용산업)’로써 활성화 할 방안은

2. 4대강유역 문화재 보존대책 방안 마련 시급 27

1) 전체 문화재 조사를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다 했는지? 또한 왜 4대강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표조사가 시행이 된 것인지?

2) 이번에 수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지표조사시 같이 시행하지 않았는지?

3) 우리나라 발굴 조사 전문인력은 2,400명 정도 되는데 대학교 고고학 전공들은 많은데 현장을 기피함

3. 소규모 발굴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1)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소규모 발굴에 대한 신청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나 지원실적은 미미함. 이에 대한 문제점은

2) 만일, 유물산포지 및 지정문화재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의 단독주택 등을 용도변경이나 재건축시에 지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인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감만 안겨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은

3) 발굴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 비영리 법인들이 소규모 발굴조사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조사기관 선정시 많은 난항을 겪음.

비영리 법인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

4.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절실 30
- 1)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 사범 적발 건수가 총 8건이며, 이중 문화재 사범의 구속이 20명, 불구속 16명 등 모두 36명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당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매장문화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임. 이에 단속을 위한 목격자의 제보가 절실함
 - 3) 문화재 절취·도굴범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우리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기업들의 참여율 제고방안 31
-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기업의 참여가 현저하게 줄.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도 문화재 보전을 위해 가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음
 - 2) 문화재지킴이 재 위촉시 철저한 심사 등 별도의 사후 관리 방안은
6. 개인소장 국보 문화재, 관리대책 강구 32
- 1) ‘충무공 고택’ 문제 등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족함. 예산 확충뿐만 아니라, 그 관리대책 강구 필요
 - 2)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는 개인소유 국보급 문화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은?
7.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 환수관련 32
- 1) 현재까지 조사한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20개국에 76,143점이나 분포되어 있음. 정부는 문화재 환수에 적극성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은
 - 2) 지금까지 해외에서 환수받은 우리 문화재는 모두 8,155점이나 되지만 대부분이 구입이나 기증해서 환수 받은 것이 5,844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 받은 문화재는 1,728점(21%)밖에 되질 않음. 그 원인은
 - 3) 해외 박물관에 지원하는 홍보예산과 보존예산 등의 항목은 문화재 환수 사업과는 지원예산 성격이 다름. 청장의 견해는?
 - 4)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환수되지 않는 것과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 5) 국가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하는게 오히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서면질의】

1. 문화재 환수 관련 37
 - 1) 일본을 제외하면 정부간 협상으로 문화재 환수한 것은 미국 해사 박물관으로부터 ‘어재연장군 수자기(帥字旗)’를 대여의 방식으로 반환받은 것이 유일한데 정부간 협상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혹시 외교부가 환수에 주도적 협상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외교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은 아닌가?
 - 2) 향후 정부간 협상을 통한 환수가능성이 있는 문화재가 있는가?
(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 반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3) 해외소재 문화재 매입의 필요성, 예산집행의 유연성
 - 4) 해외소재 중요 문화재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별도 매입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 5)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기관의 구입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우선 매입대상을 정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문화재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재청의 준비는?
2.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39
 - 1) 영릉복원공사, 태릉사격장 및 선수촌의 이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철거 등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한 사항을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
 - 2)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한 사항의 기간내 처리가 가능여부

【구두질의】

1.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규재 이경희 위원의 위촉 근거 43

2.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관련	44
3. 조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패널티 부여방안	45

<성 윤 환 의원>47

【구두질의】

1. 고종황제 어새 보물 지정선정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3번 안건을 다룬 회의록을 남기고 다수결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49
2. 지정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 최승희씨인데 이 분이 황제어새 유물평가 심의위원장을 했음 이와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49

【서면질의】

1. 보물지정 신청과 심의절차가 어떤가요? 50
 - 1) 황제어새를 심의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회차별로 신청인측인 고궁박물관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4~5명이 참가했음. 심의의 진정성 여부는?
 - 2) 황제어새의 유물가치에 대한 조사의견을 낸 분(최승희)이 동산문화재 분과위원장이며, 황제어새 보물지정 심의위원장으로 심의함. 심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는?
 - 3) 심의위원 1명은 기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고종 황제어새의 국가문화재로의 지정 관련 51
 - 1)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국새 3과(제고지보, 대원수보, 칙명지보)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 고궁박물관은 고종 황제어새의 유물매도신청에서 보물 지정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한 시각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최건의 문화재위원 선정경위 51
 - 1) 최건이 문화재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 활동 기간은?

- 2) 최건은 어떤 경위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양모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누구의 추천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백율사 청동은입사 향로, 향합 52
- 1) 근래에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백율사라는 사찰의 명칭이 각인되어 있는 청동 은입사 향로와 향합이 출토되어 거래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아는지?
- 2) 이 향로는 문화재 수집가인 김모씨가 40억원에 구입 후 위작 시비가 있었음. 만일 출토 유물이라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함. 향후 계획은
5.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뢰 의향 52
- 1)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입에도 정양모가 깊게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음, 문화재청장은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매에 청자박물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2) 최건이 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물품 구매 선정, 가격 책정의 신뢰성 여부는?
- 3)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 일반 소장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도자기를 구매하다가, 2002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해 구입함. 이는 정양모의 개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보임.
- 4) 이에, 구입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수준 이상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 관장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송 훈 석 의원> 53

【서면질의】

1. 무형문화재 관련 55
- 1) 2003년 이후 유형문화재 위주로 지정함 그 사유는
- 2)~3) 전승보조금 증액 등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1사1촌 운동과 같이 기업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연결해주는 제도 등 민간 후원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4) 문화재청 산하에도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별도 기능전수 및 교육기관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민간 혹은 문화재청 유관기관 등에 별도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와 현황을 밝혀 주기 바람
- 5)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무형문화재 전공학과 신설 추진 여부

2.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56

- 1) 지난 2007년에 전체 관람객의 9.1%까지 늘어났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작년과 올해에는 5.4%로 낮아지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립고궁박물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2) 무료관람 실시 이후 혼잡도 증가 등의 이유로 외국관광객이 관람을 포기하고 있다면 조선왕실의 생활상이나 왕실문화를 재현하는 특별전시회나 기획행사 등 외국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행사를 개발, 개최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립고궁박물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 3) 그리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중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홈페이지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왕실문화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구축해 놓았는데, 외국인 관람객을 소홀히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국립고궁박물관장의 견해는? 정작 외국인들에게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우리 왕실문화나 생활상을 자세히 알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외국인용 홈페이지의 부실제작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조속히 3가지 언어로 구축해 놓은 외국인용 홈페이지의 내용을 내국인용 수준의 내용으로 보완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 국립고궁박물관의 개선책이나 계획을 답변 바람

3. 2008년도 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관련 58

- 1) 문화재에 대한 연구, 조사, 보존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사업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유 및 대책
- 2) 전문가 및 내부고객의 자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대책
-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적한 사업만족도와 행정서비스 만족 개선 방안들에 대한 향후 계획

4.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59

- 1)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입시경쟁률이 2010년 다소 증가하였지만 2000년 개교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총장의 의견은?

- 2) 지원하는 학생들의 감소와 함께 재학생들의 제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거의 99% 가량이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점은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 총장의 견해는?
- 3) 졸업생들 가운데 10%가량은 자신들의 전공분야 이외의 분야로 취업하고 있고 20%가량은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총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 4) 올해 9월에 취임하시면서 '문화유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한국전통문화학교는 4년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학과 관련 취업에서 공인적인 인증제도도 없다는 점 등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이나 방안은?

<이 경 재 의원>63

【서면질의】

1.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운영비 2억원을 지원 받으며, 보전협약 체결은 전무하고, 문화유산 매입은 4건에 불과한데 향후 사업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은? 65
2.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중복지정 및 조난사고 급증 66

<이 정 현 의원>69

【구두질의】

1. 정부 지원 수리·복원 문화재 중 명의를 이전된 중요민속자료(고택) 현황 71
2. 황새복원 예정지 선정 관련 71
3.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관련 72

【서면질의】

1. 한국의 농악, 세계무형유산으로 ? 73
 - 1) 중국의 세계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대응전략은 ?
 - 2) 농악 등 국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극, 발굴 지원필요
2. 국내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시급 75
 - 1) 문화재가 원위치에 있지 못하게 된 사유 및 향후 복원계획
3. 송례문 복구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76
 - 1) 송례문 목재 50% 확보, 수급대책 차질없는지?
 - 2) 부재 재활용 가능여부
 - 3) 확보된 소나무, 복원용 목재로 적합한가
 - 4) 기와 훼손정도와 복원에 필요한 숫자, 수급계획과 방법
4.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시급 77
 - 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5. 4대강 사업,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77
 - 1)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주변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문화재 주변현황은 파악되었는지?
 - 2) 문화재 보존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갖고 있는 관리청으로서, 무엇보다 문화재 보존, 보호에 앞장서 별도의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은?
6. 신설되는 ‘문화재보호기금’ 안정적 운용대책 필요 79
 - 1)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내년도 운용계획과 지금 준비 중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 2) 기금이 신설됨으로써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 3) 또한, 문화재청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함. 현재 수입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음. 복권으로부터의 전입금 5% 이외에 안정적인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복안은?
7. 조선왕조역사 반환 촉구 결의안 제안, 정부 노력 촉구 80
 - 1) 조선왕조역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계획은?
 - 2) 경술국치 100주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표명해야

8.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검은거래’	81
1) 골동품상의 매매장부 작성과 지자체 확인을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9. 목조문화재 관리 소홀	81
1) 보물 제1461호 범어사 조계문 등 보물 10건에 대한 실측자료 전무, 이에 대한 대책은?	
2) 시·도지정 목조문화재 2천여점 현황과악조차 안되어있어, 이에 대한 정밀실측 및 DB구축 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은?	
10. 장애인 접근 어려운 문화유산	83

<장 세 환 의원>85

【구두질의】

1. 국토해양부의 자문위원단에 문화재위원을 추천한 사유와 실제 활동 내역	87
2. 최근 5년간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 전체 제출	87

<정 병 국 의원>89

【구두질의】

1. 영주 무섬마을 정비사업 관련	91
2. 지난해 지적한 바, 승례문 화재사고 이후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에 예산 집중 투자 중인데도 실제 점검결과 56%는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음. 원인은 지자체의 국고보조에 대한 매칭 부족으로 지적됨.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대안 방법 제출 바람)	91
3. 지방문화재 보수비의 국고보조금 전환에 대한 조치실적	92

【서면질의】

- 1.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조대왕 초상지 사적지 지정권고 결정을 번복해 버렸음. 이것이 조선왕릉을 세계적인 역사관광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앞으로 정조대왕 초상지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지 93
- 2.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종목의 충원경과 및 향후계획 94

<조 영 택 의원>97

【서면질의】

-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문제점 99
 - 1) 정부주도 국민신탁이 민간운동을 왜곡·위축시킨 것은 아닌지?
 - 2) 현행특수법인의 기능을 민간NT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기능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3) 일반 NT운동단체에게도 과세 특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2. 문화재청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실 100
 - 1)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방식 부적절
 - 2) 평가기준 불합리
 - 3) 평가방식의 문제점
 - 4)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미흡

<진 성 호 의원>105

【구두질의】

- 1. 종묘 등 5대궁에 외래수종이 섞여 있음. 창경궁에 심어진 일본산 연상홍은 천 그루를 넘음. 상당부분은 일제시대 심어진 것일 수 있으나 그간의 사업추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확인감사 전에 대책 수립 요망 107

【서면질의】

- 1. 수장고에 묻혀있는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작품 활용방안 강구 108
 - 1)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작품 구입 사업은 타당하나, 활용실적은 미미하거나 저조함 이에 대해 별도 방안을 강구하고 타 무형문화재 보급 활용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람
- 2. 발굴기관비리 척결, 문화재청의 강력한 의지 필요 108

<최 구 식 의원>109

【서면질의】

- 1. 사적 제271호 ‘경희궁’ 관리 부적절 111
 - 1) 조선의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가 관리하는 이유
 - 2) 경희궁의 역사적 중요도, 사적지가 된 배경, 경희궁 사적지에 대한 문화재청 의견?
 - 3) 경희궁내 각종 행사 관련 시설물 설치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
- 1-1. 경희궁 현상변경 허가 관련(‘프라다 트랜스포머’ 행사 관련) 112
 - 1)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의 행사로 경희궁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 기업의 일개 마케팅 행사가 사적지인 경희궁에서 열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일부에선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3) 프라다의 행사 허가기간이 2008년 4월 2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이나, 이 기간 중 가설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문화재청에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도 없었음. 따라서 프리다코리아의 현상변경 허가는 취소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4)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권한이 없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태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이유는?

- 5) 프라다코리아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 6) 2009년 7월 14일 프라다코리아에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위반으로 종로구청과 서울시 공무원, 문화재청 현상변경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
- 7) 허가기간('09.9.30까지)이 지난 10월 7일 현재 경희궁내 가설 시설물 해체작업을 끝내지 않고 있는데 프라다코리아 관계자도 문화재보호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목조문화재 옥외소화전 등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114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옥외소화전 설치의 의무인 바 현재 미설치 문화재는 서울 흥인지문 등 10곳임. 이 중 성주향교 대성전 등 7곳은 예산 확보(19억 9,500만원)하고도 옥외소화전 설치가 지연되고 있음 그 이유는?
- 2) 또 서울의 흥인지문, 동묘, 사직단은 옥외소화전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관에 영향이 있어 설치가 곤란함.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 3)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거나 이월됨. 문화재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고려할 요소가 많은 까닭에 동 사업 시행 전 문화재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보고해 주기 바람.

3. '논란 많은 문화재' 문화재청의 적극적 대응 필요 116

- 1) 천마도 모델이 '천마냐 기린이냐'는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2)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학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자구책은 없는지?

4. 해외문화재 환수노력 절실 116

- 1) G8(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국가 중 영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1건의 문화재도 우리나라에 반납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율이 지금까지 10%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3) ‘우리문화와 함께한 100년, 미공개 주요 명품 전시’라는 제목의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전체 202점 중 해외에서 대여해 전시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10점 포함되어 있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4)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등을 통해 문화재 환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5.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 관리 117
 - 1)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이 줄어든 이유
 - 2)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보존관리 예산이 1년에 5천만원에 불과함)
 - 3) 세계유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홍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4)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관련 제도의 정비, 세계유산 인근 완충구역 지정 등 조치에 대한 대책
 - 5) 세계유산에 대한 실천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인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관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추진방안
- 6. 문화재보수사업 효율적 예산 운용 절실 118
 -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예산사업)은 매년 집행율이 저조하고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근본원인이 해당예산이 국회 심의 확정된 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이에 전국적 사업인 세계유산정비사업, 고도보존정비사업, 풍납토성 토지매입 등은 일반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2) 동 사업의 경우 예결산시 매년 집행실적 부진과 과다 이월문제 등의 이유로 대폭 삭감됨(전년대비 10% 삭감). 이에 비해 문화재지정건수는 100여건씩 증가하고 있어 문화재보수정비예산의 감액폭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청장의 견해는
- 7. 문화재청, 소속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엉망 119
 - 1)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용역과제를 실제 상당수 다르게 용역을 실시하거나 용역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제멋대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2) 같은 주제를 대상별로 나눠 실시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실시함

3) 연구개발과제 중 상당수 과제가 하반기에 추진, 과다이월 발생

8. 비지정문화재 관리 문제 120

1)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적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람.

2) 비지정문화재 훼손·도난에 무방비임 관리 소홀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책은?

3) 최근 3년간 국립박물관 등에서 기증받은 문화재 중 97%인 5,451점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 사례가 없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강 승 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이주현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1. 감사원의 조사기관 중복투입 지적 및 조사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1) 감사원 감사에 배치되는 시행규칙 신설 등

- 매장문화재 발굴수요에 비해 조사기관의 공급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코자 일정한 조건아래 중복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08.9월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가 전문지식과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일로 인식되어 고고학 전공자의 신규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현실아래 교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전동의 아래 타 지역 발굴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현실성이 부족하여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기에 국회에 계류중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 당해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조사인력의 유입확대 방안과, 조사인력의 질적수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에 떠맡겨진 부분을 일정부분 공공부분으로 흡수하여 매장문화재가 제대로 보호되고 조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홍두식 사무관, 전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0, 481-4923

2.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시급

1)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모든 문화재 소장처에 화재경보시스템 및 도난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 '07년부터 추진하였으며, '08.2월 숭례문 화재 이후부터 문화재 종합방재대책에 따라 '09년까지 국보·보물 중요목조문화재 150건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하고, '10년부터 '12년까지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5건에 대해 방재시설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 국보·보물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시설 중 소화전 미설치 7건, 화재경보기 미설치 62건, CCTV 미설치 36건에 대해서는 '09년 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 도난방지시설 설치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소장처 중 개인, 단체, 문중, 사찰 등 취약소장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은 자체에서 설비를 하는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2,053건(국보 313건, 보물 1,740건 / 동일 번호로 다수 지정된 경우 포함)의 소장처별 도난방지시설 설치 대상은 335개소이지만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 사찰 등 219개소 중에서 '89년부터 현재까지 150개소 약 68.5%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 '09년에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하여 보물 제924호 천은사 아미타 후불탱화 소장처 등 2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 도난문화재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가? 경찰 및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제는

- 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사진 등 정보가 필수적이거나, 도난된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지정문화재는 개인 소장자 등의 무관심 및 관리소홀로 도난품 목록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 소장자나 관리자에게 사진 등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박물관에 위탁보관 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도난신고 접수 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문화재 사범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으로 도난·도굴 사범 신고 및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난문화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 문화재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찰청 문화재 전담수사반 : 서울지방경찰청(5명), 대전지방경찰청(2명), 해양경찰청(2명)
- 향후 도난문화재 회수 및 도난사범 검거를 위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경찰청에 문화재 전담수사반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

-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등에 설치한 문화재감정관실의 운영비 및 도난도굴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집행잔액, 홍보물 제작 및 TV 광고비의 낙찰차액 그리고 예산절감액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금 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1. 문화재청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공항 검색요원은 받은 바 없다고 하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바람

- 전국 항만과 공항의 검색요원이 문화재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여 감정요청 할 수 있도록 문화재 감정위원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의 검색요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검색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각 공항·항만 검색요원 인원 및 근무여건에 따라 연 1~7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 인천공항의 경우 여객청사 출국장 및 세관 검색장에서 검색요원 및 세관원을 대상으로 5회(회별 7~1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07년~'09.9월말 현재) 각 공항 및 항만에서 실시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공항('07년 12회, '08년 7회, '09년 5회), 부산항('07년 3회, '08년 3회, '09년 3회), 김해공항('07년 4회, '08년 4회, '09년 5회), 김포공항('07년 1회, '08년 1회, '09년 1회), 대구공항('07년 4회, '08년 4회, '09년 3회), 인천항('07년 1회, '08년 2회, '09년 1회), 제주공항('07년 4회, '08년 4회, '09년 4회)
- ※ 교육 인원, 강사, 내용 등 자세한 내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 및 항만의 검색업무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받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검색요원에 대한 문화재 검색요령 등의 교육은 위탁받은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업체의 검색요원을 대상으로 X-RAY 검색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항공사 보안팀에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추후에는 공항공사 보안팀 및 위탁 검색업체와도 사전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는 '09.11~12월 중에는 검색요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집합교육 실시계획>

- 위탁 검색업체 : '○○시스템'
 - 교육일시 : 2009.11.17~11.20(4일간), 14:00~15:00
 - 교육장소 : 인천공항 여객청사 지하1층 CS아카데미 교육장
 - 교육인원 : 100명
- 위탁 검색업체 : '○○○넷'
 - 교육일시 : 2009.12.8~12.11(4일간), 14:00~15:00
 - 교육장소 : 인천공항 여객청사 지하1층 CS아카데미 교육장
 - 교육인원 : 100명

~~김 을 동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배중권 사무관
연락처	042-481-4660

1.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건 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약 상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등에 한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06.6~’09.8 까지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문화재전자행정구축 5차 및 U-ISP 수립’ 등 23건(본청 18건 연구소 5건)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는 2회 이상 유찰(단독입찰 또는무응찰) 15건,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용역 6건 이었습니다.
 -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23건
 - 본청 :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등 18건(유찰 13건, 특정인학술연구용역 4건 기타 1건)
 - 국립문화재연구소 : 금석문종합영상DB구축 등 5건(유찰 2건 특정인학술연구용역 2건 기타 1건)
- 의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가급적 경쟁입찰 계약방법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담당자	박경희 사무관
연락처	042-860-9121

2.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기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업무분야나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서류 전형을 하는 방안으로 직원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일반직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세부전공을 요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해 채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9호, 제10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동 근거규정에 의거 2008년 학예직 4명, 2009년 학예직 9명을 서류전형·면접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으로 선발·임용하였습니다.

- 특히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조속히 기관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경력자 및 필기시험으로 우수인력 선발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 서류전형 및 면접방식을 통해 13명을 선발하였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채용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류전형·면접에 의한 선발 시 우려되는 정실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외부인으로만 구성하였으며, 면접 전 전문성 테스트와 논술시험을 통해 전공분야의 지식수준, 주제에 대한 이해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등을 평가하여 개별 면접 시 예의·품행·성실성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과 더불어 전문가적 능력, 논리 및 창의성,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직원채용에 있어 최우선순위를 투명성 및 객관성에 두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창 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황권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1

1. 4대강 사업에 편승한 조사인력 자격기준 완화로 부실조사

- 매장문화재 조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사인력의 자격을 한단계 완화시켜 기관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제도개선과 현실여건 극복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지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졸속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 조사인력 자격요건 완화를 포함한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의 근본방향은 이미 2007년 5월에 발간된 “문화유산 2011” 이라는 문화재행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책자 pp.159~16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에서는 조사인력 자격기준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조사원 교육사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전시홍보과
담당자	이재준 사무관, 전기선 사무관
연락처	02-3701-7610, 3701-7641

2.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 1) 학예연구직 채용 당시 전공과 현재에 맡은 업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학예연구직은 채용당시에 세부 전공을 기준으로 채용한다. 예를 들면 미술사분야에서도 도자기, 회화, 금속 등 전공자를 뽑는데 이들이 현재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채용 당시 전공과 현재의 직무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채용당시 전공과 현재의 직무가 상관관계가 없다면 채용시 세부 전공별 모집은 잘못되었거나 특정 전공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관련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수집·보관·전시·연구·교육하고 있음에 따라 회화류, 조각류 등 각 유물에 대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공자를 채용하여 관련 분야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세부전공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08.12.31 일부개정) [별표 2의3]에 따라 학예일반 등의 직류에 대해 정해진 전공분야 중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동 전공분야 중에서도 학문성격에 따라 보다 세분할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부분야를 지정·공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역시 필요한 경우 업무와 가장 관련성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부전공별 모집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편중현상을 막을 수 있어 박물관으로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정 전공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 채용 당시 전공자가 현재에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소 속	전 공	인원	담당업무	비 고
전시 홍보과	한국미술사(회화사)	3명	(상설회화실, 특별전 기획·운영, 상설전시실 총괄·관할 등 관리)	
	고전문학	1명	박물관교육(기획·운영)	
	국사학(조선시대)	1명		
	한국미술사(조각)	1명	(특별전 기획·운영, 상설전시실 관리 (탄생·교육실))	
유물 과학과	문화재학, 미술사	1명	상설전시실 관리	
	민속학	1명	유물구입, 소장유물 연구 및 관리	
	사학	1명	소장유물 연구 및 관리	
	보존과학(분석)	1명	유물보존처리	

※ 고궁박물관 소장유물 유형별 현황

(’09. 9. 30 현재)

구 분	수량(점)	비 고	구 분	수량(점)	비 고
회화류	289		가구류	1,550	
서예류	19		도자류	4,101	
악기류	316		토기류	362	
어보류	374		무구류	100	
어책류	373		노부류	651	
현판류	771		과학기기류	49	
제구류	13,029		피지초적류	5,218	
의상류	1,794		금속공예류	2,459	
장신구류	1,202		기타유물류	610	
고문서류	13		국가귀족 유물	932	
전적류	30				
조각류	2,096		구입유물	5,946	

2) 박물관의 학예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

- 근래에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단순한 관람만 하기 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하고 박물관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 박물관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들 말합니다. 청장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박물관 교육 전문가를 두어 박물관을 찾는 다양한 계층에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전달하는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 교육부서는 박물관 교육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으며, 박물관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박물관 교육부서 근무자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전공) 또는 보충적 교육(부전공, 학회 등에서의 훈련 등)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박물관 교육팀은 총 13명으로, 행정·사서 3명, 학예연구 2명, 계약·별정 5명, 기능직 3명입니다. 별정·계약직 공무원은 대부분 교육학, 미술사학, 박물관학을 전공하였고,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충적 교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또한, 민속박물관은 섭외교육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며 총 11명 중 행정 2명, 별정·학예연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근래에 학생들이 현장 학습시간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이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단체관람객에게 무료 전시안내 해설 지원 외에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왕실문화 체험교육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력 및 예산을 확보, 박물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어린이들의 왕실문화 관련 박물관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개발 예산을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9년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현황>				
교육프로그램명	시 기	대 상	실적(9.30기준)	비 고
임금님 알고 싶어요	1~2월	초등학생	240명(10회)	동반가족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	3~6월 9~12월	초등학생	29명(1회)	
역사돋보기	4~5월	초등학생	103명(6회)	고학년

교육프로그램명	시 기	대상	실적(9.30기준)	비 고
	9~10월	이상		
임금님이 뒀다	넷째 토요일	어린이	66명(2회)	동반가족
움직이는 보물수레	1~2월 7~8월	초등학생	374명(24회)	

3)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립중앙박물관 사례 등을 봤을 때, 국립고궁박물관내 교육과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학박사 소지자 등을 배치해 고궁박물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현재는 박물관 교육기능이 독립되지 못하고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홍보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과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의 독립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각각 독립부서로 교육팀(정원 13명)과 섭외교육과(정원 11명)를 두고 성인부터 학생, 어린이까지의 교육을 전담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국립고궁박물관은 전시홍보과에서 직원 3명이 교육기능을 담당하면서 2009년의 경우 총 18종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조직규모에 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확대되는 추세의 박물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에 전시기능과 교육 및 홍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전체의 정책적 방향으로 인해 아직까지 정부조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2010년에 수립 예정인 국립고궁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조직 관련 분야도 포함하고, 교육 및 홍보기능의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조직 확보 시 박물관 교육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 박물관의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 박물관은 관람객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소음, 어두운 조명, 기계소리, 냄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적정 소음과 관람객수에 대한 기준과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건물은 구 중앙청의 사회교육관 용도로 건립(1970년대)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1996~2004년)이 증·개축하여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이 전시장과 사무동을 리모델링하여 전관개관('07.11월)하였습니다.

- 동 건물은 당초 박물관 용도로 건립되지 않아 쾌적한 관람 환경(지하층 전시장, 공조실 인접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왕실문화유산 전문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장, 건설공사장 철도 등의 소음과 생활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박물관내는 별도로 소음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박물관내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의 제한과 술에 취한 자는 관람을 제한하는 관람규정은 있습니다.
- 현재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무료관람 실시 등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09. 9월말 현재 794천여명), 우리 관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교육과 함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색 환경 가꾸기 날”을 지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09. 8월 전시공간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실내공간 공기오염 원인물질 등에 대한 농도 등을 측정된 결과 검사항목 모두 기준치보다 매우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전시장 실내 공기질 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일부 전시실의 위치와 전시물 재질의 특성상 발생하는 냄새 문제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무료관람 실시 등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09. 9월말 현재 794천여명), 우리 관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교육과 함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색 환경 가꾸기 날”을 지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09. 8월 전시공간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실내공간 공기오염 원인물질 등에 대한 농도 등을 측정된 결과 검사항목 모두 기준치보다 매우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전시장 실내 공기질 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일부 전시실의 위치와 전시물 재질의 특성상 발생하는 냄새 문제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이 전관 개관하여 2년째로 관람객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시로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준치									
1층 전시실	150	100	1000	10	0.05	4.0	500	0.01	0.06
2층 전시실	12.1	11.9	438.5	0.8	0.009	1.2	164.5	0.0033	0.003
지하1층 전시실	33.4	10.2	449.0	0.4	0.008	1.4	267.8	0.0033	0.003
평균									

19.5 10.9 437.7 0.8 0.008 1.5 203.6 0.0027 0.003
 Rn TVOC O₃
 * PM10(미세먼지), HCHO(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CO(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

담당부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담당자	김사덕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연락처	042-860-9371, 481-9361

3.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조직과 예산확보를 통한 문화재보존 처리 중추기관으로의 육성방안

-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인력 부족과 전문기관의 부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의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보존처리 전문기관 육성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조직 및 예산 확충을 협의하여 왔으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방침 등으로 인하여 목표한 수준만큼의 조직 및 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조직분야】 1센터 5실 신설 및 38명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1센터 21명 확충
 - 【예산분야】 보존처리관련 예산 동결과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기자재 구입예산 삭감
 - ('08년) 28억원 → ('09년) 28억원 → ('10년) 22억원 (△6억원/ △22%)
 - * 기자재관련 사업비 150억원('08 ~ '14), 기 투자액 37억원
- 현재 박사급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의 채용을 통하여 조직 기반 강화 및 보존처리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보존과학분야 전문기관 육성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호 재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이길배 서기관, 정성조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5, 481-4701

1.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보존 및 개발관련

1) 태릉의 선수촌, 의릉·서오릉의 왕릉과 관련 없는 건물, 온릉·장릉의 군사시설 등에 대한 대책과 광릉·영릉 등 능력의 완충지역에 대한 적절한 개발 지침 현황은

- 태릉내 선수촌은 단계적으로 선수촌의 기능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충북 진천에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의 건립(2008.12월 기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온릉, 장릉 등 왕릉내 군사시설도 국방부에 관련시설의 이전을 협의('08.6월)하여 태릉내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을 완료('08.8월)하였고 온릉내 탄약고 및 서오릉내 보안학교에 대한 이전도 국방부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의릉내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관교사(구 국정원 건물)도 2012년 말까지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로 협의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 지난 6월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등과 조선왕릉의 보존관리와 시설물 등의 이전에 관한 협의('09.7월)를 하였고, 동 계획의 확정 발표('09.9월)후,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조선왕릉에 대한 완충지역에 대한 보존지침은 18개 권역중 현재 10개 지역을 완료하고, 영릉 등 8개 지역에 대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완료지역(10개 지역) : 광릉, 서오릉, 서삼릉, 동구릉, 융건릉, 사릉, 온릉, 파주장릉, 파주삼릉, 영월장릉
 - 추진 중 (8개 지역) : 영릉, 정릉, 태강릉, 홍유릉, 현인릉, 선정릉, 김포장릉, 의릉

2) 조선왕릉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은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와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증진 대책

- 조선왕릉은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선왕릉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의 보존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권역 중 10개지역은 완료, 8개지역은 추진 중)
-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관람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기능의 강화를 위해 각 능관리소별 탐방안내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탐방센터는 관람객 및 주변 주민들에 대한 조선왕릉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능제, 능력의 조성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조선왕릉’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스토리를 개발해야 할 것임. ‘대장금’스타일의 전통 궁중음식과 관련한 문화상품의 개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우리 청은 2007년부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회 및 교육, 경진대회,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제고와 여론 환기라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저변확대 및 이해 확산을 위해 지역 순회개최로 전환하여 오는 11월 11일부터 전남 여수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에는 궁과 조선왕릉을 주제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하 ‘한국의 집’에서는 ‘09.9월부터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대장금정식’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궁-능-궁궐음식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개발하여, ‘09년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궁궐안내해설서의 진부함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3개 궁궐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설서를 개발하여, 궁궐에 얽힌 인물·역사·사건 등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여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 콘텐츠들은 해설사 없이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궁궐 스토리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금년도에는 경복궁 대상 PDA, MP3 등 무인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다른 궁궐로 확대할 것입니다.

4) 조선왕릉의 종합적 보존관리 대책은?

- 조선왕릉이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강구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09.9월)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라 훼손된 능제복원 등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5) 조선왕릉이 등재된 이후 1주일만에 관람객이 평균 47.5%나 늘. 제주도의 경우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1년만에 관광객이 20%나 늘었음. 세계유산 등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임. 이제 이런 수천년의 지혜가 쌓여온 문화유산을 산업적 측면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헤리티지 인더스트리(Heritage Industry. 문화유산 활용산업)’로써 활성화 할 방안은

- 현재 문화유산은 관광산업, 콘텐츠 산업 등의 핵심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와 문화기술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적·기술적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09.10~12월/KAIST문화기술원)’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 동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유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하여 문화산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세계유산, 유·무형유산 등 문화유산의 형태와 특성에 따른 문화유산 활용산업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산화권 연구관
연락처	042-481-4947

2. 4대강유역 문화재 보존대책 방안 마련 시급

1) 전체 문화재 조사를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다 했는지? 또한 왜 4대강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표조사가 시행이 된 것인지?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표조사는 발굴전문법인 23개 기관 220명이 참여하여 약 80일 (2009.2.10~4.30)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들 조사기관은 사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일 뿐 아니라 4대강과 같은 중요 하천 유역의 경우 이미 상당 수준의 문화재 조사 성과가 축적되어 있어 충분한 비교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4대강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은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문화재 보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문화재 밀집매장 지역을 보존토록 한 것입니다.
- 참고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사전 조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금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사전조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이번에 수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지표조사시 같이 시행하지 않았는지?

- 4대강 사업의 육상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옛 나루터를 포함한 수중 관련 유적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인문학적·역사학적 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 다만, 육상에서는 뚜렷한 유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수중에 관련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나루터 유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중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기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수중 지표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의 2(문화재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별표 15의 2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 ※ 별표 15의 2 “자” :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동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
- 이에 의거,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내 하천 준설공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7월부터 수중조사 전문기관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수중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황권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1

3) 우리나라 발굴 조사 전문인력은 2,400명 정도 되는데 대학교 고고학 전공들은 많은데 현장을 기피함

-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은

- 지난 2년 동안 전문 조사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방문 취업설명회 개최, 홍보활동 강화, 자격요건 일부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장 발굴업무가 전문지식과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업무 특성을 갖는데 반해, 낮은 처우, 불안한 신분보장 등의 이유로 신규인력의 진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조사인력의 신규충원을 위해서는 비록 일은 힘들지만, 역사문화 발굴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안정된 직장으로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조직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조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학교 연수원을 활용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최재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957

3. 소규모 발굴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소규모 발굴에 대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나 지원실적은 미미함. 이에 대한 문제점은
- 2) 만일, 유물산포지 및 지정문화재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의 단독주택 등을 용도변경이나 재건축시에 지표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사업의 목적인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담감만 안겨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은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곳(유물산포지 등)은 발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 유물산포지 등에서 거주하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개인이 부담하던 발굴비용을 매년 국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08년부터는 지원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건당 발굴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발굴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소규모발굴자에 대하여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나, 동 사업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친 서민정책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우리청에서는 예산기관과의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영세민에 대한 충분한 발굴비 지원을 위해 예산 확충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 발굴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 비영리 법인들이 소규모 발굴조사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조사기관 선정시 많은 난항을 겪음. 비영리 법인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

- 매장문화재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발굴조사기관(비영리 법인)의 대규모 장기발굴 조사 선호에 따라 소규모발굴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청에서는 2005년 4월부터 발굴법인, 대학박물관 등 57개 조사기관에 대하여 “소규모발굴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협의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조사기관을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발굴제한기관도 소규모발굴조사에 한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발굴조사기관 협의체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소규모 발굴지원 사업(민간경상보조)을 대행토록 하면서 조사기관을 섭외·알선토록 협의한 바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발굴조사에 발굴조사기관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4.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절실

1)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 사범 적발 건수가 총 8건이며, 이중 문화재 사범의 구속이 20명, 불구속 16명 등 모두 36명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당국의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재 도난신고를 접수하면 도난문화재 정보를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재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에 문화재 전담수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경찰청에 문화재 전담수사반을 확대 설치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청과 공조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사범 검거율 및 도난문화재 회수율을 높이겠습니다.

※ 기설치 : 서울지방경찰청('06년), 대전지방경찰청('08년), 해양경찰청('08년)

향후 설치계획 : 부산·대구·광주·경북 등 지방경찰청('09년)

2) 문화재를 절취하거나 도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매장문화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임. 이에 단속을 위한 목격자의 제보가 절실함

3) 문화재 절취·도굴범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전문화, 점조직화된 문화재 사범이 민묘 석물, 고서적, 매장문화재 등 기본정보가 부족한 문화재를 도난·도굴하여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제보 및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보자 및 체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높여 나가겠습니다.
 -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 : 1등급 - 2,000만원, 2등급 - 1,500만원, 3등급 - 1,000만원, 4등급 - 500만원, 5등급 - 200만원
 - 포상금 지급현황 : ('07년) 1,500만원, ('08년) 2,500만원, ('09.9월말 현재) 500만원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배영례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5

5. 우리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기업들의 참여율 제고방안

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기업의 참여가 현저하게 줄.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도 문화재 보전을 위해 가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음.

- 이에 개인·가족·단체와의 협약 이외에 기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08년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참여가 줄었으나, ‘09년 기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 현재 기업협약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명	진행사항	기업명	진행사항
국순당	3.18일 협약체결	아시아나IDT	11월중 예정
LG하우시스	4.19일 협약체결	한국MSD	12월중 예정
스타벅스커피코리아	9.11일 협약체결	한국전력	협의중
한독약품	10월말 예정	엘리트베이직	협의중
서울메트로	11월중 예정	파라다이스그룹	협의중
종근당	11월중 예정	한국조선협회	협의중

○ 문화재청에서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관련, 기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기업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기업 브랜드 가치는 향상시키고 소유자 등의 문화재 보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특성을 살린 연계프로그램 예>

- 한독약품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건강검진
- 한국조선협회 : 최초 거북선 건조장 정비 및 복원사업 참여 협의 등

2) 문화재지킴이 재 위촉시 철저한 심사 등 별도의 사후 관리 방안은

○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자율적 참여라는 봉사활동의 특성상 실적만을 따져 해촉하는 네거티브한 관리정책을 지양하고, 문화재 애호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가급적 재위촉 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화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킴이 활동 가이드북 보급, 휴무토요일 활용 가족참여 프로그램 개발,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연 2회) 실시,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유도 등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남기황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920 481-4686

6. 개인소장 국보 문화재, 관리대책 강구

1) ‘총무공 고택’ 문제 등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족함. 예산 확충뿐만 아니라, 그 관리대책 강구 필요

- 말씀에 공감하며, 개인소장문화재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은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지정문화재는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상세한 기록을 하여 도난·훼손에 대비하고 있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관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기증·기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물전시관 등 다량 소장처에 대하여는 3년 주기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해외로 반출될 수도 있는 개인소유 국보급 문화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은?

- 문화재보호법 상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어떠한 문화재도 문화재청의 사전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될 수 없으며, 전국의 공항에 감정관을 배치하여 만일의 국외 무단 반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장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현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도난·훼손·무단 해외반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7.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 환수관련

1) 현재까지 조사한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20개국에 76,143점이나 분포되어 있음. 정부는 문화재 환수에 적극성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은

-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2009년 2월)을 수립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정부간 협상을 적극 모색하면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해외에서 환수받은 우리 문화재는 모두 8,155점이나 되지만 대부분이 구입이나 기증해서 환수 받은 것이 5,844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간 협상으로 환수 받은 문화재는 1,728점(21%)밖에 되질 않음. 그 원인은

- 문화재 환수는 국제법상 강제수단 미비로 정치적·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만, 우리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과 국민정서를 이유로 정부간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해외 박물관에 지원하는 홍보예산과 보존예산 등의 항목은 문화재 환수 사업과는 지원예산 성격이 다름. 청장의 견해는?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해 홍보 및 보존처리 지원을 하는 것은 현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황 조사 등 환수 기초 자료 수집,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박물관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 조성 등 우리 문화재 환수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현지에서 우리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4)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환수되지 않는 것과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이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국외문화재 환수 종합정책 수립·조정 역할 (문화재 환수 전담 조직)
 - 국외문화재 불법 유출성 조사·연구
 - 국가간 협의, 구입, 기증, 영구 대여 협의
 - 환수 관련 국제 활동 및 지원 (국제기구 및 문화재 피탈국 간 협력)
 - 환수 관련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육성
 - 국외문화재 DB 구축 및 관련 사이트 운영
 - 국외문화재 대외 홍보, 자료 발간·배포 등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환수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예산 : 2억원('09년) → 5억7천만원('10년 예산안)
 - 기금 : 30억원 신설('10년 기금안 / 국내외문화재 긴급 구입)
 - 전담조직 신설 행안부 협의

5) 국가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하는게 오히려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일본, 프랑스 등 우리 문화재 소장 국가가 정부간 협상을 기피하고 있어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환수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지원하고 있습니다.
 - * 민간단체 환수 지원 예산 확대 : 3천만원(’09년) ⇒ 1.5억원(’10년 예산안)
- 2009년 4월부터 효율적인 민관 협력을 위하여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등 5개 민간단체가 포함된 ‘문화재 환수 협의회’(12개 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경 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1. 문화재 환수 관련

1) 일본을 제외하면 정부간 협상으로 문화재 환수한 것은 미국해사 박물관으로부터 ‘어재연장군 수자기(帥字旗)’를 대여의 방식으로 반환받은 것이 유일한데 정부간 협상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혹시 외교부가 환수에 주도적 협상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외교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은 아닌가?

- 문화재 환수는 국제법상 강제수단 미비로 정치적·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만, 일본·프랑스 등 우리 문화재 보유국들은 자국법과 자국민의 정서 등을 이유로 정부간 협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향후 정부간 협상을 통한 환수가능성이 있는 문화재가 있는가? (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 반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타국의 성공적인 문화재 환수사례(독일 하이델베르크 문서 약250년, 벨기에 성바봉 성당 제단화 약150년, 아이슬란드 사가문서 약250년)를 보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 이므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내를 가지고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의궤(72종 154책)와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도서(296책)에 대해 정부간 협상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의 경우 프랑스 측은 자국민의 정서와 자국법을 이유로 정부간 협상을 기피하는 상황이어서 민간단체 및 유네스코·ICPRCP 등 국제 기구를 활용하여 국제적 환수여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해외소재 문화재 매입의 필요성, 예산집행의 유연성

- 문화재청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조사, 홍보, 연구, 지원 활동에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충분한가?

- 2010년은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이 편성된 첫해이므로 우선 30억원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점차 관련 예산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전략을 세우고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수년간 예산을 모아 100억원 대의 국보급 문화재를 구입하는 것이 매년 정해진 예산을 쓰기 위해 중요성이 덜한 문화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가? 예산사용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며, 우리 청은 문화재 가치성을 중심으로 매입전략을 수립, 기금을 유연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외국 옥션하우스(Christie's, Sotheby's) 상시 모니터링 등 문화재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보급 문화재 중심으로 국외 문화재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해외소재 중요 문화재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별도 매입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의 경우 소장자료 확보 차원에서 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전반적인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활동 차원에서 동산·부동산 문화재의 경매 구입, 기증 권고 등 정부 활동 추진 및 민간 활동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5)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기관의 구입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우선 매입대상을 정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문화재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재청의 준비는?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의 경우 각 기관별 소장품 수집 정책에 맞게 구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의 예산을 일괄로 관리하는 경우,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소장품 수집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여러 기관이 중복하여 경매에 응찰하거나 난립하는 경우, 경매가격 상승 및 업무 혼선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 우리 청에서는 국외문화재 구입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축을 통해 경매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 가치 확인(감정) → 기증권고 → 구입 등 단계별 환수시스템을 각 기관과 공유하여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공능문화재과
담당자	정성조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1

2.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1) 영릉복원공사, 태릉사격장 및 선수촌의 이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철거 등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한 사항을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

- 문화재청에서 '09.9월 마련한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09.9월)은 진정성이 훼손되어 있는 조선왕릉(ICOMOS 복원계획 제출 대상) 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계획(2010~2015/6년)과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계획(2016~2025/10년)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수립 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선왕릉내 타기관 등 시설물은 단기계획에 따라 이코모스에 제출한 복원계획 대상을 중심으로 이전 및 철거, 복원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및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동 계획의 수립에 앞서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을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09.7월)하였고,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등과 조선왕릉내 군사시설의 이전을 협의(’08.6월)하여 태릉내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을 완료(’08.8월)하였고, 온릉내 탄약고 및 서오릉내 보안학교의 이전을 약속받는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2)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유산 등재시 약속한 사항의 기간내 처리 가능여부

-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는 조선왕릉내 훼손된 부분의 복원을 우선추진 대상의 단기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왕릉내 이전 및 철거 대상인 개별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 하여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과정중 일부기관이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 및 대체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을 피력하고 있어 예산확보 및 대안마련 등에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 재 일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정금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7

1.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이○○ 위원의 위촉 근거

- 문화재위원 위촉자격 범위는 지난 2002년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시부터 각계 분야로 확대한 바 있고,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을 통해 점차 분야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는 현상변경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문화재 분야 전문성 뿐만 아니라 보편 타당한 균형감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 ‘02년 : 법률, 행정, 국제, 세무, 도시계획, 관광, 시민운동 등 관련분야
 - ‘07년 :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분야
 - ‘09년 :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언론, 경제, 종교 분야
- 금번 매장문화재분과위원 위촉시에 신규 분야인 언론 경제분야 위원으로 이○○ 정○○ 위원을 위촉한 것은, 매장문화재분과위가 발굴유적 보존 여부를 다루는 분과로서 각종 지역개발 등과의 상충 문제를 현안으로 안고 있는 관계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보편성있고 균형감있는 심의를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 이○○ 위원은 언론분야에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장기간의 문화부 기자 경력 등을 통해 문화유산과 문화재 행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겸비하였고, 문화유산을 직접 주제로 한 다양한 저 역서를 집필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문화재위원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이력사항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위원은 현재 ○○○○신문 경제교육연구소장으로서 경제 분야에 25년간 종사하고 있으며, 동 위원 위촉은 외부기관 추천 의뢰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분야는 재계 인사를 위촉할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성을 떨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은 제외하고 4개 경제연구소(○○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원, ○○경제교육연구소)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교육연구소가 유일하게 추천해 왔고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동 위원에 대하여는 추천 의뢰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의 위촉 기준을 추천기준으로 제시하였기에 추천기관의 권위를 신뢰하였고 오랜 언론인의 경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문화적 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시각 제공을 기대하고 위촉한 것이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김성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4

2.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관련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이월 및 재이월이 많은데, 총액계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전국에 걸쳐 연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으로, 대상지역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세부사업(소액다건)이 많아 타당성·시급성 등을 검토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1998년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의 전문성·특수성 및 총액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이 저조하나, 이월 및 재이월을 줄이고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상반기 집행률은 45.8%로 작년 대비 14.9%에 비해 30.9%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월 감소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대규모사업, 중점사업, 세계문화유산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총액사업에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거나 총액사업 내에서 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미 세계유산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별도사업으로 분리 추진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으로 향후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지방비 확보가 문제가 되는 건 지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인데, 국비선집행은 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올해부터 시작된 국비선집행이 지방비를 매칭하는 타 부서에도 공통사항인지 확인 바람

- 국비선집행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타부처 공통 지침입니다.
- 국비선집행에 따른 지방비 확보는 전액 확보되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본 지침을 적극 활용 및 지자체 독려를 통하여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실집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황권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1

3. 조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패널티 부여방안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1항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주체를 허가받은 자 및 발굴을 직접 행하는 조사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발굴조사보고서는 향후 학술활동, 연구에 중요한 유일한 자료가 되므로 보고서 미발간은 조사기관의 설립목적에 저촉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를 해결코자 국회에 계류중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엄격한 기준아래 등록제를 운영하고, 보고서 미제출 등 범위반 사항 발생시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등록취소,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의 해당업무에 관여했던 조사원이 향후 발굴에 참여할 경우에는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동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출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재촉하여 보고서 제출이 앞당겨질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발굴을 종료하고 공사가 끝나면 해체·해산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정사업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T/F팀)의 경우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 2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에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 윤 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1. 고종황제 어새 보물 지정선정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3번 안건을 다룬 회의록을 남기고 다수결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 현재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자료에 참석위원과 심의결과를 정리한 형태로 작성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물 제1618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¹⁾” 보물 지정 관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은 기 제출해 드린(‘09.9.21)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 최승희씨인데 이 분이 황제어새 유물평가 심의위원장을 했음 이와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 유물구입가치 평가 위원이 문화재지정을 심의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동 건의 답변은 서면답변 1번, 2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1. 보물지정 신청과 심의절차가 어떤가요?

○ 보물지정의 절차는 [지정신청→전문가3인조사→문화재위원회검토→지정예고 관보
공고(30일 이상)→문화재위원회심의→지정 관보고시]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황제어새를 심의한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에는 회차별로 신청인측인 고궁박물관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4~5명이 참가했음. 심의의 진정성 여부는?**

- 국립고궁박물관이 선정한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은 동산문화재분과위원과 중복되지 않았으며, 또한 회의에도 중복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유물의 구입가치를 평가하는 유물구입심의평가회의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를 검토,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황제어새의 유물가치에 대한 조사의견을 낸 분(최○○)이 동산
문화재분과위원장이며, 황제어새 보물지정 심의위원장으로 심의함.
심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는?**

- 유물의 구입가치를 평가하는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선정하는 것이며, 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를 조사,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지정조사를 위해 문화재청의 선정과 의뢰로 이루어진 위원입니다.
- 최○○ 위원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선정한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물의 구입가치에 대한 평가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위원으로서 유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를 조사, 평가하는 조사위원에 참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을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을 포함한 동산분과 문화재위원 13명은 보물지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검토 심의를 하는 등 최대한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인 조사’(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지정 대상 문화재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황제어새의 경우 역사적 측면(최○○·이○○), 인장의 형태적 측면(손○○))들이 지정대상 문화재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지정가치 여부를 사전검토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문화재위원회 분과회의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게 하고 단시간·제한된 공간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 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지정조사위원들이 구입심사신청기관과 관련 없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정조사위원들이 문화재위원회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은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위원 1명은 기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기권 1명은 의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분이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2. 고종 황제어새의 국가문화재로의 지정 관련

- 1)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국새 3과(제고지보, 대원수보, 칙명지보)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 고궁박물관은 고종 황제어새의 유물매도신청에서 보물 지정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한 시각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무수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판단을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청된 문화재에 한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은 박물관 측의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최○의 문화재위원 선정경위

- 1) 최○이 문화재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 활동 기간은?

- 문화재전문위원은 1997년 ~ 2007.4.24, 문화재위원은 2007.4.25~현재입니다.

- 2) 최○은 어떤 경위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양모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누구의 추천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 선정은 2007년은 한국공예학회, 2009년은 한국미술사학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4. 백울사 청동은입사 향로, 향합

- 1) 근래에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백울사라는 사찰의 명칭이 각인되어 있는 청동 은입사 향로와 향합이 출토되어 거래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아는지?
 - 동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향로는 문화재 수집가인 김모씨가 40억원에 구입 후 위작 시비가 있었음. 만일 출토 유물이라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함. 향후 계획은
 - 현재 검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으로, 향후 도굴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귀속(도굴품일 경우)이 결정되어 우리 청으로 이관되면 보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686

5.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뢰 의향

- 1)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입에도 정○○가 깊게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음, 문화재청장은 중앙박물관의 도자기 구매에 청자박물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국립중앙박물관 소관사항으로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최○○이 중앙박물관의 구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물품 구매 선정, 가격 책정의 신뢰성 여부는?
 - 국립중앙박물관 소관사항으로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국립중앙박물관은 과거 일반 소장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도자기를 구매하다가, 2002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해 구입함. 이는 정○○의 개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보임.
 -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관한 사안으로, 문화재청장이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에, 구입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수준 이상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 관장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구입 관련 사안은 문화재청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송 훈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한국전통문화학교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김한옥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4 041-830-7110

1. 무형문화재 관련

1) 2003년 이후 유형문화재 위주로 지정함. 그 사유는

- 문화재를 유·무형으로 구별하여 그 중요성을 달리 인식하여 지정실적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는 그 실체가 있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기준인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도를 통해 지정 신청되는 건수도 희소하고 지난 5년간 지정실적에서 보듯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기준 미달로 부결되는 비율이 높아 신규지정 건수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지난 5년간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된 신규지정 종목 37건에 대해 25건이 부결되고 4건이 지정되었으며, 8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부결률이 67.5%에 이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유·무형 문화재간 문화재 지정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보존 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3) 전승보조금 증액 등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1사1촌 운동과 같이 기업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연결해주는 제도 등 민간 후원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09년부터 판소리 등 18개 활성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 보유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이 증액된 월130만원,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증액된 월 70만원을 지급하여 전승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재정여건상 직접 지원금 증액에는 어려움이 있어 1사1촌 운동과 같이 '한문화재 한지킴이' 기업체 후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23종목 24명의 전승자들이 기업체로부터 월정지원금과 공연, 전시 등을 후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전승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4) 문화재청산하에도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별도 기능전수 및 교육기관 조차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민간 혹은 문화재청 유관기관 등에 별도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와 현황을 밝혀 주기 바람

- 현재 적극적으로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비롯하여 112개 전수교육관에서 512종목 중 231종목 전승자들이 기·예능 연마 및 후계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으로 대부분 보유자 등 전승자들의 위탁관리하에 전승 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유네스코 카테고리Ⅱ급 기관인 아태무형유산센터 국내유치를 계기로 아·태 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적 교류의 거점이자, 전국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교육, 전시,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무형문화시설인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무형문화재 교류와 전승의 메카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무형문화재 전공학과 신설 추진 여부

- 전통복식 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큰 전통문화분야 3~4개 학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전공학과로 신설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학과 신설보다는 본교 전통문화연수원 장기연수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2011년 기예능공방이 건립되면 무형문화재 종목의 연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전시홍보과
담당자	이재준 사무관, 노명구 사무관
연락처	02-3701-7610, 3701-7641

2.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1) 지난 2007년에 전체 관람객의 9.1%까지 늘어났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작년과 올해에는 5.4%로 낮아지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립고궁박물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국립고궁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관람인원 대비 '08년 5.6%, '09년 9월말 현재 5.5% 정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8%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무료관람 시행 등에 따라 내국인 관람객 증가율이 63.4% 정도로 외국인 관람객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정체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전체 관람객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관람객 수가 적을 때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홍보활동,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획전시, 외국어 안내 설명 등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람객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8년 및 2009년 동기간 관람객 현황 비교 >

구 분	관람인원		비 고
	전체	외국인	
2008. 1~9월(A)	485,916명	27,485명	전체 인원대비 외국인 비중
2009. 1~9월(B)	793,869명	43,428명	
증감인원(C=B-A)	307,953명	15,943명	- 08년 5.6%
증감율(C/A)	63.4%	58.0%	- 09년 5.5%

2) 무료관람 실시 이후 혼잡도 증가 등의 이유로 외국관광객이 관람을 포기하고 있다면 조선왕실의 생활상이나 왕실문화를 재현하는 특별전시회나 기획행사 등 외국인에게 특화된 다양한 행사를 개발, 개최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립고궁박물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외국인 관람인원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으로는 주요 국제공항·항만 등에 외국어 안내브로슈어 배포 및 홍보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인 방문지역(인사동, 명동,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등)에 외국어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주요 외국공원, 국제기구 등(170여개소)에 홍보영상물을 배포하였으며, 외국의 한국소개 책자에 지속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 소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전시를 통한 외국인 관람객 유치활동으로는 현재 조선왕실의 생활상 및 왕실문화를 재현한 특별전시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상설전시실의 유물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전시를 통해 외국인 관람객이 다채로운 조선왕실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대상 “체험으로 배우는 왕실문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 향후에도 외국인 방문객 대상의 이벤트·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전 등의 전시에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해외문화원·한국관광공사 등을 활용, 외국인 대상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 그리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중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홈페이지 내용이 다소 부실하고 왕실문화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구축해 놓았는데, 외국인 관람객을 소홀히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국립고궁박물관장의 견해는? 정작 외국인들

에게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우리 왕실문화나 생활상을 자세히 알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외국인용 홈페이지의 부실제작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조속히 3가지 언어로 구축해 놓은 외국인용 홈페이지의 내용을 내국인용 수준의 내용으로 보완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 국립고궁박물관의 개선책이나 계획을 답변 바람.

- 현재 국어 외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았으나, 콘텐츠 면에서 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금년에는 영어 홈페이지 개선부터 시작하여 홈페이지에 실릴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국인 홈페이지 수준으로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담당자	김동대 사무관
연락처	042-860-9131

3. 2008년도 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관련

1) 문화재에 대한 연구, 조사, 보존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사업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유 및 대책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외부전문가의 사업만족도가 전체평균보다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자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고객에 대한 자료 접근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정식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진행 중인 조사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자료를 즉시 제공하지 못하여 만족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 전문가 및 내부고객의 자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대책

- 전문가 등의 사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으로 보고서, 책자 등 자료 발간시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관계자에게 직접 이메일로도 알리고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 연구소에서는 자료정보관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금년 말 완료 목표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아카이브”를 구축중이며 향후 본격 시행시 자료 접근성 만족도가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지적한 사업만족도와 행정서비스 만족 개선 방안들에 대한 향후 계획

- 사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연구과제 제안 기회를 확대 하고, 또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연구과제 추진 시 적극 활용 하도록 하는 등 연구과제의 수행 및 결과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민원 전담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 하는 등 자료 게시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당자	박종민 사무관
연락처	041-830-7120

4.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입시경쟁률이 2010년 다소 증가하였지만 2000년 개교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총장의 의견은?

- 2000년 개교 초 특수목적의 국립대학이라는 특성상 취업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2000년 28:1, 2001년 1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별도의 혜택이 없어 이후 점차 하락하였고, 2005년도에는 2.8:1이라는 개교 이래 최저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경쟁률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자체 입시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홍보 강화, 고교 방문홍보 확대 등 입시홍보를 강화하고, 특별전형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 이후 경쟁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입시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당자	김한옥 사무관
연락처	041-830-7110

2) 지원하는 학생들의 감소와 함께 재학생들의 제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거의 99% 가량이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점은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 총장의 견해는?

- 2006년 이후 제적학생 비율이 전체학생의 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전국 대학 정보공시 자료 중 중도탈락 학생현황(제적)은 국·공립대학 3.2%, 사립대학 4.4% 전체평균은 4.1%로 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 주로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로는 전공과목이 본인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전공을 택해 타 대학에 진학하거나,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형편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 이 점을 감안하여 재학생에 대한 적성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하기 위해 학생 개인별 담당지도 교수 지정 운영 및 연 3회 이상 학생상담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숙사 및 교우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제적생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당자	박종민 사무관
연락처	041-830-7120

3) 졸업생들 가운데 10%가량은 자신들의 전공분야 이외의 분야로 취업하고 있고 20%가량은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총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 본교는 전통문화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문화재 관련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 문화재 기관·단체,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실습학기제, 방학 중 현장실무연수 등을 도입,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에 진로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교 교수들의 학생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 실적 심사 시 진로 지도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20% 반영)하였음은 물론 교과과정 개편(12회)을 통해 문화재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 기관·연구소·발굴법인 등이 직원 채용 시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 설치가 필수적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당자	김지성 사무관
연락처	041-830-7220

4) 올해 9월에 취임하시면서 '문화유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한국전통문화학교는 4년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학과 관련 취업에서 공인적인 인증제도도 없다는 점 등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이나 방안은?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지위에 따라 '대학'명칭 사용 및 '대학원 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대학 이미지 저하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이 '대학' 명칭 사용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을 공동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 제18대 국회에서는 이진삼 의원 등 여야 의원 19인이 '대학'명칭 사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상정과 대체토론을 거쳐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대학'명칭 사용도 우리 학교로서는 긴요한 사항이지만 전통문화관련 기관·단체의 인력채용 시 석사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 설립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학제 개편을 비롯한 학교의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발전방안 전문가 컨설팅 T/F를 구성·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학교 발전방향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 재 의 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원성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698

1.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운영비 2억원을 지원 받으며, 보전협약 체결은 전무하고, 문화유산 매입은 4건에 불과한데 향후 사업 지원 및 지도 감독에 대한 계획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정부가 문화적 가치가 큰 곳을 문화재보호지역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보전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부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 등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고,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설립 당시 (2007년)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 정착비용인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였고 또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기부금은 지정기탁인(국민신탁법 제11조)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2008년~2009년 각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 국민신탁법 제19조에 의한 보전협약 체결은 문화유산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수차례의 지난한 협의를 통해 상호간 이해(조건)가 충족되어야 이뤄지는 것으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아니며 신탁설립 이래 보전협약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협약 대상	추진경과	비 고
서예가 일증 김충현 유작 기증 약정	'07.6 협의추진 '07.11약정서 수령 '08.8 기증자, 전당, 신탁 협의 '09.5 일부예산지원 전당 통보	예술의전당 상설전시실 마련 조건부로 기증하였으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상설전시관 마련 애로로 지연
장면총리가옥	'09.9 현재 잠정 중단 '07.10 위탁관리 제안 '08.5 직접보수 후 관리단체 지정여부 검토(종로구)	종로구청 소유로 보수공사 완료('09)후 관리단체 지정 여부 검토 방침으로 지연 - 종로구청과 협의 예정('09)
동화작가 권정생 흙집	'07.9 협의 추진 '08.4 권정생추 채단 설립 후 논의결정	권정생어린이재단을 설립, 채단측에서 등기·보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업무 종료

보전협약 대상	추진경과	비 고
	'09.5 권정생어린이재단에서 직접 보전결정	
안동 번남댁	'07.9 협의추진 '08.11보전협약(대차 20년) 약정서 수신 '09.6 보전협약추진을 위한 TF구성 및 현지조사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 등 고려 시 20년 대차에 막대한 보수비 투입되는 점을 감안, TF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성 제기로 내부 검토 중
입청각	'09.9 석주선생 증손 이항중간 협의	종친회 개최시 국민신탁제안 설명회 예정

- 또한 아울러 2008년에는 문화유산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목록(보전대상문화유산목록)을 1차 조사하여 보전협약 체결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민신탁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부문화 현실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모금액 : 8억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자립기반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문화유산 국민신탁 지원 및 지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김동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1

2.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중복지정 및 조난사고 급증

- 우리청은 동·식물의 역사적·문화적·학술적 측면에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자연생태계의 종 보전 차원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지정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5. 9. 1 국무조정실에서 멸종위기종은 자연 생태계의 種 보존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천연기념물은 문화적 보전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양 부처의 지정목적이 다른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중복지정은 불가피하므로 양 부처의 지정제도를 서로 존중하여 업무처리토록 조정이 있었습니다.
- 현재 환경부(자연자원과)는 멸종위기종 증감 등 실태조사를 위한 전국 멸종위기종 분포 조사사업, 멸종위기종 발견시 자생지 등 지역 보호조치사업, 종 증식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면에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 번식지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의 중복사용은 없으나 각종 사업 추진시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천연기념물 조난사고 증가는 최근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일부 개체의 증가로 조난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조류보호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천연기념물 로드킬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정 현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박희용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1

1. 정부 지원 수리·복원 문화재 중 명의를 이전된 중요민속자료(고택) 현황

○ 최근 5년간 우리 청에 보고된 보수·정비 예산지원 중요민속자료(고택)의 소유자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일자	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신 소유자	구 소유자	변경사유
2006	중민	167	무안 다장열가옥	조○○	나○○	경매
2007	중민	148	제원 정원태가옥	정○○	정○○	상속
2008	중민	205	정온전쟁쟁가	정○○	정○○	상속
2009	중민	127	어재연장군쟁가	어 ○	어○○	상속
2009	중민	233	아산 견채고택	김○○	이○○	채권담보에의한 소유권이전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김동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1

2. 황새복원 예정지 선정 관련

- 고압선은 황새의 감전과 충돌 사고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황새가 서식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황새마을 평가지 신청부지 인근의 방해요인(도심지, 비행장, 골프장, 공업단지, 고속도로 등)이 존재하면 감점 처리토록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송전탑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 평가 결과, 예산군이 송전탑으로 인한 감점요인이 있었지만, 방해요인 중 하나인 송전탑의 위치 때문에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은 본래의 평가기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평가기준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 ※ ‘IUCN(세계자연보존연맹) 재도입 지침서’에는 멸종위기종 재도입시 과거 번식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음
- 따라서 황새마을 조성시 송전선로에는 일본 황새마을 사례처럼 항공장애표시구, 회전물체 등을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줄이고, 송전탑에 대해서는 상단을 등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심을 박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황새피해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보호가치가 높은 동물 종과 그 서식지, 번식지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흑두루미는 전국일원을 소재지로 하는 동물종으로 1970년 10월 30일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흑두루미는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로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순천만, 천수만 지역 등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월동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순천만 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안습지로 해안생태경관 및 흑두루미, 멧황새 등 국제 희귀조류가 찾는 생물학적 가치가 뛰어나 2008년 6월 10일 명승 제4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순천만 북쪽 4~5km 지역이며, 서식지, 번식지 등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경유하거나 이용하더라도 공사 중단 등의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이재필연구관
연락처	042-481-4968

1. 한국의 농악, 세계무형유산으로

1) 중국의 세계무형유산 등재에 대한 대응전략은 ?

- 중국의 조선족농악무 등재와 관련하여 조선족 농악무와 한국 농악의 차이는? 농악의 등재 선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응전략?
- 금년에 신청한 농악 5건의 내년 등재 전망과 문화재청의 역할?
- 유네스코 등재이후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3종목(판소리, 종묘제례, 강릉단오제)의 사후관리는?
- 금번 중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조선족농악무는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강제 이주한 조선족이 전승해온 것으로 중국·북한의 사회주의적 예술이 깊게 반영되어 악기, 복식, 타법, 기량면에서 우리농악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 농악은 한반도내에서도 지역적 다양성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 농악의 등재 선점에 따른 동북공정의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제도’는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나 ‘세계유산제도’와는 달리 등재절차나 요건이 단순하고 등재수의 제한이 없는 제도로서 특정 무형유산의 탁월한 가치 및 우수성보다는 ‘무형유산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문화의 우월성을 배제하여 ‘인류공동의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보존하는 취지의 제도로서, 중국의 조선족농악무 등재가 우리 고유의 농악보다 우월하거나, 우리농악의 등재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번에 등재된 중국 무형유산 22건 중 조선족농악무를 포함한 8건이 중국내 소수민족 무형유산이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인류공동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무형유산 등재제도의 취지를 볼 때 동북공정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 창조성, 우수성을 인류공동의 무형유산으로 확대하여 보호·전승하고자 많은 무형유산을 등재시킬 계획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위원국(24개국) 및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 심사 보조국(6개국)으로 활동하여 상당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농악 5건을 포함하여 금년에 신청한 40건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묘제례·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세계무형유산에 기 등재된 종목은 등재를 계기로 무형유산의 진흥 및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행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종묘제례·종묘제례악은 2007년부터 국제행사 수준의 종묘대제를 추진(문화관광 기금 4억원)하고 있으며
- 판소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 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하여 우리소리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고,
- 강릉단오제는 2006년부터 매년 국외 공연단 초청 및 국외홍보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도시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무형유산보호의 국제적 선도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동 3종목에 대한 전승지원은 월전승지원금, 행사지원금, 명예보유자 특별지원, 전승장비지원 등이며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목	등재일	월전승지원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61,800	67,200	67,500	79,680	79,680	69,680	78,000	68,000	90,000	661,540
종묘제례	2001.5.18	21,600	24,600	23,700	43,680	43,680	43,680	48,000	48,000	55,000	351,940
판소리	2003.11.7	-	-	-	180,000	180,000	180,000	203,000	184,000	145,000	1,072,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89,280	109,500	108,000	105,000	411,780
종목	등재일	행사지원금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3,000	4,000	4,000	4,000	5,000	5,000	7,000	5,000	5,000	42,000
종묘제례	2001.5.18	10,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	-	-	225,000
판소리	2003.11.7	-	-	-	19,850	26,600	35,650	48,900	26,000	-	157,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12,000	19,500	4,000	2,000	37,500
종목	등재일	기타(명예보유자, 각종 특별지원금, 전승장비 등)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12,000	6,500	3,000	3,000	3,000	21,000	18,000	10,000	5,000	81,500
종묘제례	2001.5.18	124,400	13,100	19,000	5,000	2,000	2,000	5,000	8,500	-	179,000
판소리	2003.11.7	-	-	-	13,000	13,000	3,000	3,000	4,000	-	36,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11,060	2,000	6,600	-	19,660
종목	등재일	민간경상보조(보존회 운영비 및 행사 지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계
종묘제례악	2001.5.18	-	-	-	-	-	-	-	10,000	-	10,000
종묘제례	2001.5.18	-	-	-	-	-	-	-	90,000	100,000	190,000
판소리	2003.11.7	-	-	-	-	-	-	180,000	60,000	40,000	280,000
강릉단오제	2005.11.25	-	-	-	-	-	-	130,000	150,000	150,000	430,000

- 또한, 동 3종목에 대하여서는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전승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승기반강화를 위해 전승자 충원(보유자, 조교), 전승장비 지원(종묘제례 복식, 악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행사지원(기획행사, 지역축제 등)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농악 등 국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극, 발굴 지원필요

- 1988년 임실필봉농악 지정 이후 현재까지 농악에 대한 무형 문화재 지정신청 또는 직권조사 사례가 있는지?
- 구례지역 농악의 무형문화재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토속성이 강한 마을농악을 제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1988년 임실필봉농악 지정 이후 지금까지 농악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은 3건(금산농악, 남원농악, 구례잔수농악)입니다.
- 2000년에 금산농악, 2004년에 남원농악, 2009년에 구례잔수농악이 문화재위원회에 검토되었으나, 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이 부결되었고, 현재 남원농악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보존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의 지적하신 구례지역농악(구례잔수농악)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호대책마련 지적과 관련하여,
 - 현재 전라남도에서 구례잔수농악의 무형문화재 지정재 신청('09.8.25)을 하였고, 문화재청은 구례현지를 방문하여 구례군청 및 구례잔수농악보존회 관계자와 현지실사를 위한 사전협의('09.9.23)를 마치고, 내년 2월에 관계전문가의 현지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청은 농악뿐만 아니라 많은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지정·보존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무형문화재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최장락 사무관, 박왕희 서기관
연락처	042-481-4838, 481-4914

2. 국내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시급

1) 문화재가 원위치에 있지 못하게 된 사유 및 향후 복원계획

- 우리 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국보·보물 국가지정문화재 중 원위치가 아닌 건축 문화재는 총 52건(박물관 28건, 관공서/학교 6건, 사찰 내 5건, 기타 야외 13건)입니다.

- 문화재는 원위치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댐 건설 등 수몰지역의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문화재 훼손 및 도난 등의 우려가 있어 문화재를 박물관 등으로 이전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이외의 지방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문화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기관으로서 원위치가 아닌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재도 현황 파악 및 문화재에 대한 안전성 및 타당성 확보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 위치 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청와대 내에 있는 석불좌상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단체가 서울시이므로 관계기관인 청와대, 서울시, 박물관 등과 협의하여 이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경희궁 흥화문이 경희궁 제자리에 이전, 복원 되었는지?

- 경희궁 흥화문 원래의 위치에 구세군 빌딩이 있어 문화재위원 현지조사를 거쳐 불가피 하게 경희궁 정문 현 위치에 이전·복원 하였습니다.

- 서울시에서 경희궁 복원당시 승정전이 함께 복원되지 못한 사유?

- 승정전은 일제시대 때 매각되어 현재 동국대 정원각으로 사용되고 있어, 경희궁 복원시 불가피하게 이전·복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문화재로의 원위치 복원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포
담당자	이정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8

3. 승례문 복구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1) 승례문 목재 50% 확보, 수급대책 차질없는지?

- 승례문 복구에 사용될 대형 목재는 확보 완료하였고, 나머지 목재는 크기가 작은 일반재(직경30cm이하)로, 시중에서 확보가 가능하기에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2) 부재 재활용 가능여부

- 훼손된 부재 가운데 재사용이 가능한 부재는 전체 훼손부재(약 47,600재)의 38%인 18,472재이며, 전시 및 교육용으로 사용가능한 부재는 그 가운데 14,235재입니다.

3) 확보된 소나무, 복원용 목재로 적합한가

- 승례문 복구용으로 확보된 소나무는 준경묘 소나무와 국민들이 기증한 국산 소나무이며, 현재 경복궁에서 건조 중 입니다. 특히 준경묘 소나무의 경우, 1960년대 승례문 보수공사 시에도 사용된 금강송으로 크기가 크고 재질이 치밀하여 예부터 궁궐의 전각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4) 기와 훼손정도와 복원에 필요한 숫자, 수급계획과 방법

- 승례문에 사용되었던 기와는 총 13종 30,774매이며, 이 중 대부분은 1997년 승례문 기와공사 시 KS기와로 교체되었습니다. 승례문 복구에 사용될 기와는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통적인 기와 제작방법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박왕희 서기관
연락처	042-481-4914

4.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시급

1)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및 향후계획

- 우리 청에서는 반구대암각화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시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2001.10~2003.7)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수로변경, 차수벽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암각화 보존 및 주변 경관 보호를 우선시 하는 우리청 및 학계·시민단체와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댐 기능 유지를 우선시 하는 울산시의 입장차이로 인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국무총리실에서도 동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문화재청, 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 회의를 개최하여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 수위조절을 통해서 보존 추진토록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6.19/6.26/7.15, 3회 실시)
-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울산지역을 포함한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확보방안’ 연구용역 실시(11월 완료 예정) 중에 있으며, 동 용역 결과에 따라 반구대암각화 보존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앞으로도 반구대암각화와 함께 주변 역사경관 보존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울산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암각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도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신희권 연구관
연락처	042-481-4947

5. 4대강 사업,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1)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주변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문화재 주변현황은 파악되었는지?

- 우리 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에 반

영하여 문화재 밀집 매장 지역은 공원 또는 녹지공간이나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토록 함으로써 문화재가 보존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문화재 밀집 매장지역 →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 조성
- 우선 발굴 조사지역 →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 우선 투입

※ 이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문화재 보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최근의 문화재 행정 패러다임 및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화 입법 취지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하고자 한 것임.

○ 4대강유역에 분포하는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문화재 169건(한강 29, 낙동강 66, 금강 62, 영산강 12)

구분	제외지 (제방과 제방사이)	제내지 (제방+50m)	주변유적 (제방+50m~500m)	합계
한강	2건	9건	18건	29건
금강	6건	15건	41건	62건
영산강	-	5건	7건	12건
낙동강	2건	11건	53건	66건
합계	10건	40건	119건	169건

* 제외지 지정문화재 :

- 한강(영릉·녕릉, 중원창동 마애불)/ 금강(논산 미내다리, 부여 구두래 일원,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공주 곱나루, 금강철교, 어름치<천연기념물>)/ 낙동강(망우정, 용당리가야진사)

- 매장문화재 분포지 및 비지정문화재

구분	제외지 (제방과 제방사이)	제내지 (제방+50m)	주변유적 (제방+50m~500m)	합계
한강	107건	117건	178건	402건
금강	74건	118건	258건	450건
영산강	48건	23건	98건	169건
낙동강	178건	82건	201건	461건
합계	407건	340건	735건	1,482건

**2) 문화재 보존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갖고 있는 관리청으로서,
무엇보다 문화재 보존, 보호에 앞장서 별도의 보존대책을 수립
해야 함.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은?**

-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시 확인된 매장문화재분포 추정지 등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 전 문화재 보존대책이 수립,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홍창남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1

6. 신설되는 ‘문화재보호기금’ 안정적 운용대책 필요

1)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내년도 운용 계획과 지금 준비 중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 정부는 '09. 10. 1일 ‘10년도 문화재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1,034억원 규모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입은 일반회계 615억원, 복권기금 358억원, 문화재관람료 40억원, 기부금 20억원으로 편성함
- 지출은 경상사업비 1,002억원, 기금운영비 1억원과 여유자금 3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사업비는 예방적 관리 352억원, 긴급 보수 및 복원 141억원, 소규모 발굴 등 손실보상 57억원, 조사연구 및 민간 활동 248억원, 문화유산 보존 등 기타 분야 204억원이 반영됨
- 현재, 2010년도 문화재보호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동법 시행령 제정, 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전문인력 채용 등 각종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기금이 신설됨으로써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 문화재보호기금의 신설로 내년 문화재 예산이 처음으로 5,000억원 규모를 넘어섰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여 복권기금수익의 5%를 매년 문화재 분야에 사용할 있게 되었으며, 복권기금 전출금(5%)은 연간 400 ~500억원 규모로 문화재 전체예산의 10% 수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기금 신설로 증가된 예산은 지금까지 투자가 미미한 분야인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시스템 마련, 문화재 긴급보수 및 주민손실보상 등에 대폭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문화재청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함. 현재 수입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음. 복권으로부터의 전입금 5% 이외에 안정적인 새로운 자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복안은?

- 영국(국민복권수익) 및 프랑스(개발부담금) 등 주요 선진국의 문화유산 기금 운영·조성 사례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기금의 추가 수입재원을 발굴하여 빠른 기간 내에 문화재기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외국의 문화재기금 운용 현황

구분	명칭	설립근거	개요
영국	유산복권기금 (Heritage Lottery Fund)	국민복권법 (1993년)	국민복권 수익의 16.7% 할당
프랑스	문화재개발부담금	문화재개발부담금법 (1981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미국	역사유적보존기금 (Historic Preservation Fund)	국립역사유적보존법 (1966년)	정부예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국제교류과
담당자	오춘영 연구관,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686, 481-4739

7. 조선왕조의례 반환 촉구 결의안 제안, 정부 노력 촉구

1) 조선왕조의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계획은?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의례는 3,000여 책 이상으로, 현재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조사(2008~2010년 정밀 실태 파악)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조사가 완료되면 신속히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궁내청 소장 의례 현황 : 72종 154책
 - ※ 1922년 5월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황실에 기증
-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의례 : 3,430책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 546종 2,940책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 287종 490책

2) 경술국치 100주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 표명해야

- 의원님의 지적대로, 조선왕조의례 환수를 위하여 한·일간 고위급 회담 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본의 신임 정권과 적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8.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검은거래’

1) 골동품상의 매매장부 작성과 지자체 확인을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 문화재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2007.7.27부터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전년도의 매매장부를 검인하고, 매매 등 현황을 우리 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보고를 독촉하는 문서를 수차례 시달하고 유선으로 수시로 독촉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나, 2009.9월말 현재 검인 현황은 전체 898개 중 706개 업체가 완료되었습니다.
- 장부작성 등을 준수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일선 지자체에 주의 촉구하겠으며, 검인 및 보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매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영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917

9. 목조문화재 관리 소홀

1) 보물 제1461호 범어사 조계문 등 보물 10건에 대한 실측자료 전무,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밀실측 대상인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는 151건으로서, 완료 114건, ‘09년도 추진 중 5건이며, 미 추진 32건에 대하여는 2013년까지 총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08년부터 신규로 지정되어 실측도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목재문화재는 2010년 우선적으로 정밀실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간이실측도면이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

- 4개소(조선효종 영릉 재실, 돈암서원 응도당, 청송대전사 보광전, 직지사 대응전)
- 아울러, 목조건축물을 신규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시 실측도면을 구비, 첨부토록 함으로써, 목조문화재 보존,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할 계획입니다.

※ 미추진 32건 : ‘13년까지 완료계획(매년 15억원, 총 60억원 소요 *예산증액 필요)

* ‘09년 예산 : 4억원

<참고자료>

○ '09년 추진현황

- 국보 제67호 화엄사각황전(2차, '09.10 완료예정)
- 보물 제162·151호 장곡사 상·하 대웅전(1차)
- 보물 제448·449호 봉정사 화엄강당·고금당(1차)
- 현공정('09. 10월 현재) : 정밀실측 및 관련 문헌 조사 중

2) 시·도지정 목조문화재 2천여점 현황파악조치 안되어있어, 이에 대한 정밀실측 및 DB구축 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은 ?

- 지방지정 문화재는 2009. 10월 현재 총 6,865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목조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는 약 2,067건이고, 단위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지정 중요 목조문화재(유형문화재)는 약 607건입니다.
- 지방 지정 중요목조문화재 607건 중 정밀실측 자료가 구비된 문화재는 111건으로 18%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일괄으로 지정되는 지방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이 있는 문화재 약 1,460건 중 정밀실측이 이루어진 문화재는 약 93건으로 9%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방지정 목조문화재의 정밀실측 및 DB구축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력 및 예산부족과 2005년부터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예산이 우리 청 총액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분리되면서 목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지방지정 목조문화재 대부분은 문화재 보수·정비시 작성되는 간이실측 도면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관리 부실 등으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조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체와 협력하여 “지방지정 목조문화재 정보 관리 DB”을 구축토록 하고,
- 지방지정 목조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공능문화재과
담당자	나명하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6

10. 장애인 접근 어려운 문화유산

- 5대 공능 등 주요 유적기관, 점자블록 설치 단 3곳 불과
- 편의시설에 점자형 소개책자, 음성안내 시스템 등도 설치해야
 -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공·능·유적기관에 경사로 설치, 리프트 설치, 주차시설 설치, 화장실 건립,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배치 등을 통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 점자블록은 용릉(2곳)과 현충사(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음성안내시스템의 경우 경복궁과 창덕궁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문화재로서 공·능·유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문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뢰, 2009.4월 ~ 2009.8월까지 「공·능·유적기관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용역 결과의 배치계획에 따라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10년 3억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 세 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신희권 연구관
연락처	042-481-4947

1. 국토해양부의 자문위원단에 문화재위원을 추천한 사유와 실제 활동 내역

- 문화재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우리 청에서 추천한 5인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위촉한 위원은 1인(최○○, 현 사적분과 문화재위원)이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횟수는 1회이며, 그 회의가 자문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순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 참석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국토해양부 및 참가위원에게 직접 확인).

2. 최근 5년간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 전체 제출

- 최근 5년간 실시된 지표조사 약 6,560여 건에 대해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 병 국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권석주 서기관
연락처	042-481-4831

1. 영주 무섬마을 정비사업 관련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주 무섬마을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현지 조사(10.16.(금))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홍두석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0

2. 지난해 지적한 바, 승례문 화재사고 이후의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에 예산 집중 투자 중인데도 실제 점검결과 56%는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음. 원인은 지자체의 국고보조에 대한 매칭 부족으로 지적됨.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대안 방법 제출 바람)

- 승례문 화재로 인하여 '08.5월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절감액 중 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원을 방재예산으로 긴급하게 추가 편성하였으나, 연중긴급편성과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50%)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 2008년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총 118건 중 현재는 완료 52건, 공사중 62건, 설계중 4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예산 336억원, 국비 168억원, 지방비 168억원)는 총 173건 중 완료 8건, 공사중 68건, 공사계약추진중 57건, 설계중 32건, 지방비 미확보 8건(대구 7건, 경기 1건)입니다.
- 지방비 미확보 지역인 대구, 경기도는 11월 중 지방비가 편성될 예정이라고 확인되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2010년부터는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지방비 분담율을 50%→30%로 조정하고, ②2010년도 방재사업은 지방비가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가내시 시점을 앞당겨 2009.10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하겠습니다.
- 또한 ③방재전문가들의 현장점검, 자문 및 지도를 통하여 설계 및 설계승인기간을 단축하고, ④매월 추진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김성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4

3. 지방문화재 보수비의 국고보조금 전환에 대한 조치실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월)에 따라 문화재 보수관리 기능과 재원이 '05년부터 지방(분권교부세)에 이양된 후 지방문화재 관리의 애로점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권 교부세의 국고보조금 환원을 위해 관계 기관 업무협약 등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 ※ 관계기관 업무협약 경과
 -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문화재청장) : 2006. 10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문화재청장) : 2006. 10월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협의 : 2007. 5월
 - 기획재정부 협의 : 2008. 9월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의견 제출 : 2008. 10월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협의 : 2009. 8월
- 참고로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교부세(15개부서 163개사업, 2004년) 중 국가로의 환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해당부서의 판단,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청은 시·도 문화재 보수정비의 국가로의 환원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이주헌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1.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조대왕 초상지 사적지 지정권고 결정을 번복해 버렸음. 이것이 조선왕릉을 세계적인 역사관광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앞으로 정조대왕 초상지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지

- 화성 용·건릉(사적 206호) 주변 화성 태안3 택지예정지구 내 1,2,3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5.09.30~2007.02.28 까지 실시되었으며, 발굴완료 시점인 2007.05.09 제4차 지도위원회에서 1·3 지점 건물지 및 재실터를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부지로 보존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05.18 매장분과 5차 위원회에서 지도위원회 의견대로 조치하도록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7.09.27 ‘용건릉·용주사 효 역사문화권역 추진 위원회 및 용주사 용릉 봉양회’ 등이 민원을 제기하여 2007.10.26 매장문화재분과 제10차 회의에서 1·3지구를 연결하여 사적으로 지정토록 권고하였으나 뒤이은 2007.11.23 매장문화재분과 제11차 회의에서 ‘사적분과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후 결정토록 함’ 으로 의결되어, 2007.12.03 매장분과와 사적분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분과 제5차 회의 당초 보존안대로 ‘1·3지점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하되 두 지점을 연결하는 녹지동선을 개설’ 토록 하자는 의견을 반영,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치사항은 현지조사 위원이 위원회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며 문화재위원회에 재부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은 의결서 상에 ‘현지조사 후 재심의(재검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정조대왕 초상지 중 초상 봉분은 용릉 경역 내에 위치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발굴 과정에서 나온 구 재실터는 기초석렬 등 건물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능역 상설제도의 핵심시설물인 정자각, 비각, 수복방, 홍살문 등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아 사적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현재까지 왕릉의 이장으로 남아있는 재실터 등 초상지를 사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 또한, 정조대왕 왕릉터에 대한 사항은 수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자문위원의 검토와 정부 관계부처(‘08. 7월 문화체육관광부, ‘09. 2월 총리실)의 최종 협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선정하여 재실터 및 건물지는 보존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활용하고 옛길 북편 일대(약 577,000㎡)는 효테마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사적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시 기존 보상 합의한 이주대상자(208명)인 지역주민들의 반발 및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손실 등 사회적 비용증가가 예상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이재필 연구관
연락처	042-481-4964,68

2.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종목의 총원경과 및 향후계획

- 보유자 부재종목 14건 중 금년에 보유자 총원을 완료할 종목은 7건,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전환을 검토하는 종목은 3건, 나머지 4종목은 금년에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10년에 보유자 총원 예정입니다.
 - 09년 총원완료 종목 : 거문고산조, 대금정악, 진주검무, 소목장, 옹기장, 금속활자장, 한지장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종목 :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제주민요
 - '10년 총원예정 종목 : 종묘제례악, 곡성돌실나이, 명주짜기, 바디장
- 특히, 장기 보유자 부재종목인 제주민요, 옹기장, 거문고산조는 보유자 인정예고 중이의제기, 평가대상자의 기량미달, 전승자간 과열경쟁 등으로 보유자 총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민요는 학술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옹기장, 거문고산조는 금년에 보유자 총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 보유자 총원을 지적하신 살풀이춤, 경기민요, 궁중빈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살풀이춤은 살풀이춤 장단복원을 완료한 상태이고, 다만 보유자 총원은 보유자 부재종목을 중심으로 총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살풀이춤의 전승여건(보유자 1, 전수교육조교5)을 감안할 때 당분간 총원계획이 없습니다.
 - 경기민요는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유파전승과 관련이 없는 종목으로 검토되어, 목계월계 보유자 총원은 불가하며, 현재 전승여건(보유자 2, 전수교육조교5)을 감안할때 당분간 총원계획이 없습니다.
 - 궁중빈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08.2.19)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궁중다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09.1월), 현지조사('09.9월)를 완료하고, 종목지정 여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검토('09.11월)예정입니다.
- 공예 및 음식종목 중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18종목 중, 7종목(조선왕조궁중음식, 경주교동법주, 침선장, 화혜장, 금박장, 석장, 번와장)은 보유자가 최근에 인정(2004~2008)되어 현재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을 갖춘 이수자를 양성하는 중이며, 1종목(한지장)은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던 중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 신규 보유자를 총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6종목(낙죽장, 두석장, 바디장, 전통장, 주철장, 염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수자가 없거나 1

명인 종목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사시 선정 예정인 전수교육조교의 2배수를 대상으로 기량을 평가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선정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종목(배첩장, 사기장)은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 대상자의 기량 미비로 부결(배첩장-1998.2000.2003.2004년, 사기장-2005.2008년)되었고, 1종목(화각장)은 2008년에 첫 이수자가 배출되어 전수교육조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종목(누비장)은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사의 철회를 요청(2008. 개인 사정)하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 영 택 의 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원성규 사무관
연락처	042-481-4698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문제점

1) 정부주도 국민신탁이 민간운동을 왜곡·위축시킨 것은 아닌지?

-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신탁운동을 정부지원 여부를 근거로 순수한 민간운동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운동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NT운동의 방법론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100여 년 전 산업혁명기에 시작된 영국의 NT운동과 196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NT운동이 그 성격이나 방법에서 서로 다르듯이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적 NT운동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미국의 경우도 1940년 후반 역사유산을 보존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형성되면서, 1949년 의회 승인아래 비영리 사설단체(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 박물관, 역사적 건축물을 일부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진 것은 1966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가 통과되면서부터이며,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1969년부터 1998년까지 30년간 연방의 재정지원을 통해 투자수익, 기부금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면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가 지원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민신탁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부문화 현실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모금액 : 8억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자립기반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민간운동을 왜곡·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NT운동과 정부주도운동의 접점, 즉 정부나 NGO단체들이 해낼 수 없는 제3의 영역에서 국민신탁재산을 보전해나가는 법적인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현행 특수법인의 기능을 민간NT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 기능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영미뿐 아니라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NT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국제적 연대기구인 세계내셔널트러스트기구(INTO)에 참여한 각국 NT운동 단체들의 운동 유형은 첫째, 중앙의 NT운동단체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중앙주도형 둘째, 지역 트러스트 주도형으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 영국·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형, 일본·호주와 같은 경우는 지역형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유형의 국민신탁법인이 우리 상황에 맞을 것인가 등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일반 NT운동단체에게도 과세 특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국민신탁법인은 기부·증여를 받거나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재산을 취득, 보전·관리하여야 하나, 현재 기부문화 미 정착으로 신규 보전재산 취득, 보전·관리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각종 과세(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는 문화유산을 기부·증여하는 풍토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국민신탁 활성화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 정부기능을 보완하고, 공익목적 수행하는 국민신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신탁법인 및 기부자에 대한 국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 민간NT운동 단체들에게까지 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분야 NGO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조세 특례제한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수반돼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현행제도 아래에서 일반 NT 운동단체가 국민신탁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신탁법 제19조에 의한 보전협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김동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1

2. 문화재청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실

1)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방식 부적절

- 종을 복원, 번식시키는 장소의 선정은 과학적 조사와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황새의 서식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지역 등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1994년 충북 음성에서 번식하던 마지막 황새가 사망함에 따라 1996년 황새 복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황새복원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최종 번식지였던 충북 음성군과 청원군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충북 음성군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청원군은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의한 사업포기로 최근까지도 황새복원 예정지가 선정되지 못한 채 한국교원대학교 내 황새복원센터에서 인공증식만 진행되어온 상태였습니다.
- 황새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황새를 야생방사하기 위한 시설 및 서식지(습지) 조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황새의 서식조건(환경적 측면)만이 충족되는 지역 등을 선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사업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서식지 적합도 평가시에도 역사적 자료, 연구결과, 현장 방문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문화재청 평가는 신청한 4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실제 황새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의 발굴 등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입지를 복수 발굴,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 텃새 황새가 선호하는 서식지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황새복원센터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4곳의 황새 번식지 외의 과거 번식지를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27개 시·군 138개 읍·면, 421개의 리 단위의 촌락을 현장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통한 청문조사를 통해 총 26곳의 황새 번식지를 추가 확인하였으며, 황새 번식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특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아울러, 총 26곳의 황새번식지 환경적 특성(1970년대 환경자료 기준)을 근거로 GIS 기반 다기준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서식지 적합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황새 번식지에 관한 기존 문헌자료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과학적으로 황새의 번식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 이러한 과거 번식지 26곳의 과학적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황새마을 조성시 해당 시·군이 대상부지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므로 전국 공모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황새서식 환경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황새의 번식을 목격한 증언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각 지점별로 추정되는 최종 번식시기는 194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이후 개발과정에서 많은 생태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 사업결정시 해당 조사가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움

- 과거 번식지 주변의 황새서식환경을 1970년대 환경자료에 기준하여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황새가 서식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기준화하였으며, 이를 각 평가지역의 현재 환경요인(2007년 기준)에 대입하여 서식지 적합도를 평가하였습니다.
- GIS 기반 다기준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적 환경요인과 함께 인위적 환경요인인 330ha 이상의 도심과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도심도로(2007년도 기준자료 참고)의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따라서 연구결과에 1970년대 이후의 개발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었습니다.

2) 평가기준 불합리

- 서식지 적합도 평가의 경우,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 없을 정도의 단순한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가의 식견과 견해를 차단하고, 평가항목의 심사위원 배점이 모두 동일한 반면, 방해요인 부문의 배점이 가장 높은 지역(예산군 18점, 서산시 4점, 해남군 0점)이 사업 예정지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서식지 적합도 평가에 포함된 환경요인들은 황새 번식지에 관한 선행연구자료, 해외 전문가 의견, 국내 과거 황새번식지(청문조사로 확인된) 선택의 유용한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요인(예, 물 조건, 번식지 조건, 먹이 및 섭식 행동 조건, 휴식지 여건, 둥지 조건 등) 중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평가될 수 없는 항목으로 GIS를 이용한 사전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 개개인의 주관적 견해에 의지해 평가될 경우,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며, 5x5km의 넓은 세력권을 가지는 황새의 서식지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국지적 환경의 조건만을 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식지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서식지 적합도 평가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서식지 평가 항목은 시·군 전체를 평가하는 항목(60점)과 황새마을 부지를 평가하는 항목(40점)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황새복원사업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황새마을은 방사될 황새의 야생화 훈련(사육장 내), 야생방사, 방문자 교육 등의 기능을 하게 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배점을 60점과 40점으로 각각 배분하게 된 것이다.
- 또한, 황새마을 선정은 지자체의 사업계획(100점), 서식적합도(100점)의 점수를 종합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일부 항목에서 감점이 많다고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가방식의 문제점

- 황새마을 사업의 경우 최저, 최고 점수를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음
 - 황새마을 대상지 심사는 관계전문가 5명의 심사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였음
 - 3개 지자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100점)와 서식지 적합도 평가(100점)를 합산한 심사평가 결과는 예산군 187.2점, 해남군 175.2점, 서산시 161점이었으며,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환산할 경우에도 예산군 187점, 해남군 175.3점, 서산시 163점으로서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 평가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식지 적합도 평가의 가장 큰 배점이 반영된 과거 번식지 유무(40점)는 황새복원센터의 07년 청문조사결과 1순위로 나타난 예산군(40점)에 유리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해당조사에서 누락된 해남군의 경우 번식을 입증(사업계획서에는 주민 증언 반영됨)하지 못함에 따라 불이익(30점)을 받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과거 번식지에 복원하는 것은 복원의 기본 원칙이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복원 지침서에 따르면 “멸종된 생물 중 복원은 역사적 서식지에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번식지 유무에 40점의 높은 배점을 두었고,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거 번식지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 해남군의 경우 2007년 청문조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업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황새복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충청도와 경기도의 과거 번식지 청문조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번식지 확인 작업을 사업평가 전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계전문가 현장방문시 확인하였으나, 번식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참고로, 세계적으로 조류복원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까지 모두 54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모두 과거번식지에 복원하였습니다. 복원을 시도한 54종 가운데 23종(43%)만이 복원에 성공하였으며, 복원 대상지역이 과거 번식지로 우선시되는 이유는 생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요인(서식지 면적 뿐만 아니라 온도, 강수량 등)에 적응해야 하는데, 각 지역마다 이러한 환경요인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번식지의 경우 월동지역에 비해 이러한 환경요인에 대한 요구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 번식지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 비해 종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초 환경요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과거 번식지에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원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 번식지가 없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 과거 번식지와 생태 환경적으로 아주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료출처 : Beck et al. 1994, Kleiman et al. 1994).

4)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미흡

- 고압선로의 존재여부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서식지 적합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청이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하여 심사 위원에게 제공했어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 황새마을 선정은 사업계획서 등 1차 심사 후 사업계획서 내용과 신청부지의 적정성, 사실확인 등을 위해 2차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산군도 현지실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없다고 언급된 송전탑이 현지조사시 확인되어 심사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였으며, 이에따라 평가시에는 송전탑이 방해요인으로 반영되어 감점 처리되었습니다.

- 충남도청 이전사업과 같은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 도심에 의한 영향은 평가항목에 방해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선행연구자료를 근거로 3km 이내에 도심이 위치할 경우, 감점요인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지역은 8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 성 호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공능문화재과
담당자	나명하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6

1. 종묘 등 5대궁에 외래수종이 섞여 있음. 창경궁에 심어진 일본산 연상홍은 천 그루를 넘음. 상당부분은 일제시대 심어진 것일 수 있으나 그간의 사업추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확인감사 전에 대책 수립 요망

-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훼손된 5대궁의 원형 복원사업을 통해 외래수종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전통수종으로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1983~1986년)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식재한 왕벚나무, 가이즈까향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을 제거하고 소나무 등 전통수종을 식재하였으며
 - 경복궁 경회루 주변 프라터너스, 가이즈까향나무 등을 제거하고, 소나무, 단풍나무 등 전통수종을 식재하였음
- 현재 5대궁의 수목 분포현황은 98,928주이며,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는 95,911주(97%), 외국(중국, 일본 등) 원산지인 것은 3,017주(3%)입니다.
- 수목의 식물학적 원산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우리나라에 오래전 도입되어 토착화된 전통수종(매화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과 1900년대 이후 도입된 외래수종(튤립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궁궐의 전통조경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외래수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외래수종 제거, 전통수종 식재 등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외국 원산지 수목 중 외래수종 분류, 제거대상 선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10월중) 후 개선지침 마련
 - 2009년 : 각 궁 별 외래수종 제거계획(전통수목 대체 식재 포함) 수립 및 자체 제거 가능 수목에 대한 우선 제거 조치
 - 2010년 : 각 궁 별 잔존 외래수종 제거 및 전통수종 대체 식재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종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4

1. 수장고에 묻혀있는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작품 활용방안 강구

1) 무형문화재 전통공예작품 구입 사업은 타당하나, 활용실적은 미미하거나 저조함 이에 대해 별도 방안을 강구하고 타 무형문화재 보급활용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람

- 1979년 이후 구입작 2000여점에 대해 90% 이상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박물관, 해외공관 등 각 기관에 대여·이관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일부는 상설전시 등 자체 활용을 위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학교,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등 전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국·내외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이주헌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2. 발굴기관비리 척결, 문화재청의 강력한 의지 필요

- 검찰수사와 재판으로 확인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의 비리사건은 발굴조사 시 인원의 중복투입 및 제경비의 과다계상 등 회계처리 미숙이나 소요비용의 부적절한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며 문화유적의 고의적인 훼손이나 파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됩니다.
- 우리 청에서는 비리사실이 확인된 문화재 발굴전문 법인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주의 조치를 발송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해당 기관에 통보 한 바 있습니다.
- 향후,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비리발생 사안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며, 문화재 발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유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리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사회적·경제적 파장이 심할 경우, 해당 발굴전문 법인에 대하여서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 구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최장락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8

1. 사적 제271호 ‘경희궁’ 관리 부적절

1) 조선의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가 관리하는 이유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1945년 이왕직으로부터 인수받아 구황실사무청으로 발족하여 문화재 관리업무를 관장하였으며, 1961년부터 문교부 외국 문화재 관리국을 설치하여 4대궁을 비롯한 조선왕릉 등을 관리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경희궁은 1910년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숭정전 등 경희궁에 남아있던 중요한 전각들이 대부분 헐려 나갔고, 그 면적도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광복 후에도 계속 서울중고등학교로 사용되었고, 그 후 현대건설에 매각되었다가 1986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경희궁지 발굴조사를 거쳐 숭정전 등 정전지역을 복원하여 2002년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2) 경희궁의 역사적 중요도, 사적지가 된 배경, 경희궁 사적지에 대한 문화재청 의견?

- 경희궁지는 조선 인조(1624년) 때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이 불탄 이후 280여 년 동안 창덕궁과 더불어 역대 왕들이 머문 왕궁지입니다. 1907년부터 1910년에 걸쳐 일제에 의해 경희궁내 주요 전각들이 이전 또는 철거되고 경성중학교가 설립되는 등 궁이 일부 훼손되는 수난을 겪었으나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왕궁유적이며, 조선후기 궁궐건축에 사용된 건축양식 및 궁중생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 경희궁지의 이러한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71호로 지정(1980.9.16)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 소유로 종로구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정이후 서울시에서 경희궁 복원정비를 위하여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숭정전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하여 숭정전 월대와 계단을 비롯한 어도의 적심석, 그리고 좌우 행각지 숭정문지 등 유구가 밝혀졌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1988년 흥화문의 복원과 1990년 숭정전의 복원 등 경희궁지의 정비·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향후, 경희궁지의 추가적인 정비·복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경희궁내 각종 행사 관련 시설물 설치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경희궁지 내 각종 시설물 설치 등 현상변경 행위는 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1. 경희궁 현상변경 허가 관련(‘프라다 트랜스포머’ 행사 관련)

1)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의 행사로 경희궁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지만 특정 기업의 일개 마케팅 행사가 사적지인 경희궁에서 열렸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프라다코리아의 경희궁내 행사는 미술, 영화, 패션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행사이며, 임시 철골 구조물은 단순한 현대건축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렘 쿨하스)가 설계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공공 디자인을 통한 문화 체험기회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희궁 해외홍보 등 국제 홍보를 의도한 것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특정 기업의 마케팅 행사가 사적지인 경희궁에서 열렸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에는 고궁의 역사문화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 일부에선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사항은 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문화재위원의 현지 조사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궁의 역사문화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프라다의 행사 허가기간이 2008년 4월 2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이나, 이 기간 중 가설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문화재청에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도 없었음. 따라서 프라다코리아의 현상변경 허가는 취소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권한이 없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행태에 대한 견해와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이유는?

5) 프라다코리아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 3)~5)번까지는 아래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다코리아의 경희궁내 행사는 미술, 영화, 패션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행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렘 쿨하스)가 설계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희궁 해외홍보 등 국제 홍보를 의도한 것임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 다만, 허가기간 연장 과정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사항(기간연장)은 문화재청 허가사항임에도 서울시에서 시도 위임사항으로 잘못알고 2차례에 걸쳐 프라다코리아에 허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우리청은 서울시 허가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서울시의 행정행위를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변경허가('09.2월) 하였으며, 서울시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철저와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6) 2009년 7월 14일 프라다코리아에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위반으로 종로구청과 서울시 공무원, 문화재청 현상변경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

- 2009년 7월 14일 프라다코리아에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통지(가설 시설물 설치 기간연장)한 사항은 6월 프라다코리아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허가기간 연장)이 들어와 제7차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이탈리아 대통령의 경희궁지 내 트랜스포머 행사 방문이 확정 될 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9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심의 의결되어 조건부로 허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조건부 허가 내용

- 이탈리아 대통령의 경희궁지 방문 시에 한해서 '09.9.30까지 연장
- 시설안전, 관람객 안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점검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것
-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2009.2.27일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현상변경 업무에 관해서는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 허가기간('09.9.30까지)이 지난 10월 7일 현재 경희궁내 가설 시설물 해체작업을 끝내지 않고 있는데 프라다코리아 관계자도 문화재보호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프라다 트랜스포머 가설시설물의 조속한 철거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 등을 검토하여 고발 조치토록 서울시·종로구에 통보(2009.10.14) 하였으며,
- 서울시에서는 프라다코리아로부터 2009.11.15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출받아 철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구조물이 허가기간 경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사적지 경관과 분위기에 저해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적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홍두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0

2. 목조문화재 옥외소화전 등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에 대해 옥외소화전 설치는 의무인 바 현재 미설치 문화재는 서울 흥인지문 등 10곳임. 이 중 성주향교 대성전 등 7곳은 예산 확보(19억 9,500만원)하고도 옥외소화전 설치가 지연되고 있음 그 이유는?

- 2009.10월 현재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총 150건(승례문 제외)으로 옥외소화전이 미설치된 곳은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대성전 등 7건이며, 지연 사유로는 지방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내에 옥외소화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 또 서울의 흥인지문, 동묘, 사직단은 옥외소화전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관에 영향이 있어 설치가 곤란함.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2월 시행)에 따라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 옥외소화전 시설은 반드시 물탱크실, 펌프실 등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 특성상 옥외소화전 설치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문화재별 특성을 감안해 옥외소화전과 동일한 적정 수압이 유지될 경우에는 상수도 소화전으로 설치해도 좋다는 유권해석과 소방법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소방방재청과 협의 완료(2009.9월)하였습니다.

3)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거나 이월됨. 문화재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고려할 요소가 많은 까닭에 동 사업 시행 전 문화재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보고해 주기 바람.

- 숭례문 화재로 인하여 '08.5월에 문화재 보수사업비 절감액 중 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원을 방재예산으로 긴급하게 추가 편성하였으나, 연중긴급편성과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50%)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 2008년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총 118건 중 현재는 완료 52건, 공사중 62건, 설계중 4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도(예산 336억원, 국비 168억원, 지방비 168억원)는 총 173건 중 완료 8건, 공사중 68건, 공사계약추진중 57건, 설계중 32건, 지방비 미확보 8건(대구 7건, 경기 1건)입니다.
- 지방비 미확보 지역인 대구, 경기는 11월 중 지방비가 편성될 예정이라고 확인되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2010년부터는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율을 50%→30%로 조정하고, ②2010년도 방재사업은 지방비가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가내시 시점을 앞당겨 2009.10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하겠습니다.
- 또한 ③방재전문가들의 현장점검, 자문 및 지도를 통하여 설계 및 설계승인기간을 단축하고, ④매월 추진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남기황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920, 481-4686

3. ‘논란 많은 문화재’ 문화재청의 적극적 대응 필요

1) 천마도 모델이 ‘천마냐 기린이냐’는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재의 학문적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학계의 몫이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가치를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받아 지정·관리·보호 업무에 활용합니다.

2)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학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자구책은 없는지?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학문적 논란사항에 대해서는 학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해석’은 학문적 영역이며, ‘가치판단’은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들로부터 검증받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조동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9

4. 해외문화재 환수노력 절실

1) G8(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국가 중 영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1건의 문화재도 우리나라에 반납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영국, 러시아에 소재한 우리문화재 중 도난 또는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를 파악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 해당 국가와의 정부간 협상을 모색하면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율이 지금까지 10%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미비하고 우리문화재를 보유한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과 국민 정서를 이유로 정부간 협상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지만,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정부간 협상을 모색하면서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우리문화와 함께한 100년, 미공개 주요 명품 전시’라는 제목의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전체 202점 중 해외에서 대여해 전시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10점 포함되어 있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외에 소재한 우리문화재는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해 유출 경로 조사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 등을 통해 문화재 환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10년도 문화재보호기금에서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비로 30억원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 의원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당자	채수희 서기관
연락처	042-481-4737

5.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 관리

1)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이 줄어든 이유

- 전체적인 문화재청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보존관리 예산이 1년에 5천만원에 불과함)

- 세계유산보존관리 예산 5천만원은 세계유산모니터링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는 문화재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지원되어 2008년에 국비 191억원, 2009년에 국비 218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3) 세계유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홍보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추진중인 세계유산 정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연구용역 중인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강화 중장기 발전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관련 제도의 정비, 세계유산 인근 완충구역 지정 등 조치에 대한 대책

- 전담부서의 설치는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의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의 명확화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은 2012년 유네스코 정기보고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계유산에 대한 실천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인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관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추진방안

- 금년부터 세계유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관련 기관과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세계유산포럼’을 개최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크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김성일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4

6. 문화재보수사업 효율적 예산 운용 절실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예산사업)은 매년 집행율이 저조하고 과다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근본원인이 해당예산이 국회심의 확정된 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이에 전국적 사업인 세계유산정비사업, 고도보존정비사업, 풍납토성 토지매입 등은 일반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총액 사업에서 별도사업(일반예산)으로 분리하거나 총액사업 내에서 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 사업의 경우 예결산시 매년 집행실적 부진과 과다 이월문제 등의 이유로 대폭 삭감됨(전년대비 10% 삭감). 이에 비해 문화재 지정건수는 100여건씩 증가하고 있어 문화재보수정비예산의 감액폭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청장의 견해는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집행실적 부진과 과다 이월로 인해 '10년 예산(안)이 '09년 예산대비 10% 삭감되었으나, '09년에 많은 집행개선 노력을 통해 상반기 집행률 45.8%로 전년 상반기 대비 30.9% 집행개선('08년 상반기 14.9%)을 이루었으며, 연말에는 약 70% 이상의 집행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세계자연유산 보존연맹의 권고사항 (보존관리계획) 이행 및 서울 풍납토성 등 문화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화재보호 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규모 예산투입 필요한 실정입니다.
- '10년 예산안에 시도 신청액의 23% 수준인 1,9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최소 30% 수준인 2,400억원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류근식 사무관
연락처	042-481-4787

7. 문화재청, 소속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엉망

1)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용역과제를 실제 상당수 다르게 용역을 실시하거나 용역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제멋대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예산편성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행정환경과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새로운 연구과제가 필요한 경우 시급한 과제로 변경하여 추진하거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새로운 과제를 일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같은 주제를 대상별로 나눠 실시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실시함

- 용역과제 전반에 걸쳐서 유사중복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같은 주제를 대상별로 나눠 실시한 “전통가옥 기록화” 사업은 지역별·대상별 그 가치 및 특성이 상이하어 각 대상가옥별로 나눠 추진하였으며, “중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3D스캔”과 “조선왕릉 정밀실측” 사업은 관련 업체 중 전체를 맡아 기간 내 추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고, 일괄 발주 시 이월 발생 우려 등 제반 상황을 검토, 분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결과물 및 수탁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구개발과제 중 상당수 과제가 하반기에 추진, 과다이월 발생

-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고, 과제를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전철수 사무관, 남기황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락처	042-481-4820, 481-4920, 481-4686

8. 비지정문화재 관리 문제

1)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적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비지정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역사성·예술성·학술성 등이 낮지만 비지정 문화재 역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비지정문화재 훼손·도난에 무방비임 관리 소홀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책은?

-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개인, 문중 등의 소장자나 관리자에게 사진 등 자료 확보 또는 박물관 위탁보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찰, 서원·향교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 현황조사 및 DB구축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재 도난 도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청은 연차적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상세한 기록을 하여 도난·훼손에 대비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장고 등 보관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립박물관 및 시도 공립박물관 등에 기증·기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물전시관 등 다량 소장처에 대하여는 3년 주기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국립박물관 등에서 기증받은 문화재 중 97%인 5,451점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 사례가 없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국립박물관 및 시도 공립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기증을 받고 있으며, 또한 박물관은 기증 및 자료수집, 교육 및 학술적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증 및 수집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해당 박물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전문가에 의하여 역사성·예술성·학술성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기증문화재를 소유한 박물관으로 하여금 지정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토록 하고, 국가지정조사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동산문화재 일괄공모에도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